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9-6

ISBN 978-89-98568-60-3



Daejeon Welfare Foundation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

김이배, 김동기, 신희정, 류선화

• **책임연구원**

김이배 (사회와복지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원**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희정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선화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부장)

• **위촉연구원**

김한중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대리)

• **연구지원**

김연아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차장)

손진희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대리)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9-6

ISBN 978-89-98568-60-3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연구

• • 차례 • •

요약 vi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민관협력 개요 9

 1. 민관협력의 개념 9

 2. 공공과 민간의 관계 모형 10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

 4. 민관협력의 쟁점 14

 제2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민관협력사업 현황 15

 1. 중앙정부 15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16

 3. 부산시 다복동 사업 19

제3장 대전시 민관협력사업 현황 23

 제1절 사업 개요 23

 1. 추진목적 및 방향 23

 2. 세부 사업내용 23



3. 주체별 역할	25
4. 2019년 동-거점복지관 매칭 현황	27
제2절 사업 현황	28
1.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석결과	28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석결과	30
제3절 소결	34
제4장 민관협력 성과분석	37
제1절 분석방법	37
1. 분석틀	37
2. 성과분석틀	38
제2절 양적조사 결과	45
1.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 분석결과	45
2.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행인력 설문 분석결과	59
3.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위원 설문 분석결과	68
4.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수행인력 설문 분석결과	77
5. 대상별 양적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비교	87
제3절 질적조사 결과	91
1. 분석결과 요약	91
2. 주제별 분석내용	92
제5장 결론 및 제언	115
제1절 결론	115
제2절 제언	117
1. 총론	117
2. 개선방안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25

 부록 1. 설문조사지 125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144

 부록 3.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146



• • 표 차례 • •

〈표 1-1〉 연구과정	6
〈표 2-1〉 공공과 민간의 관계모형	10
〈표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현황	13
〈표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3
〈표 3-1〉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세부 사업내용	24
〈표 3-2〉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주체별 역할	25
〈표 3-3〉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동-거점복지관 매칭 현황	27
〈표 3-4〉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구성 및 운영현황	28
〈표 3-5〉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단위: 천원)	29
〈표 3-6〉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자문 건수	29
〈표 3-7〉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	30
〈표 3-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	30
〈표 3-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인원	31
〈표 3-1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단위: 천원)	32
〈표 3-1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	32
〈표 3-12〉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단위: 천원)	33
〈표 4-1〉 공모사업 유형	37
〈표 4-2〉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	37
〈표 4-3〉 조사대상별 내용	39
〈표 4-4〉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지 구성내용	39
〈표 4-5〉 구 수행인력 설문지 구성내용	40
〈표 4-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지 구성내용	40
〈표 4-7〉 동 수행인력 설문지 구성내용	41
〈표 4-8〉 FGI 구성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42
〈표 4-9〉 FGI 질문구성	44
〈표 4-10〉 응답자 특성	45

〈표 4-1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46
〈표 4-1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49
〈표 4-1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51
〈표 4-14〉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53
〈표 4-15〉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55
〈표 4-16〉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57
〈표 4-17〉 응답자 특성	59
〈표 4-18〉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60
〈표 4-19〉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63
〈표 4-20〉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65
〈표 4-2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인력 직무만족도	67
〈표 4-22〉 응답자 특성	68
〈표 4-2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70
〈표 4-2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72
〈표 4-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75
〈표 4-2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만족도	76
〈표 4-27〉 응답자 특성	77
〈표 4-2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79
〈표 4-2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81
〈표 4-3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83
〈표 4-3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	85
〈표 4-32〉 구 협의체 위원 조사결과	87
〈표 4-33〉 구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공무원) 조사결과	87
〈표 4-34〉 동 협의체 위원 조사결과	88
〈표 4-35〉 동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조사결과	88
〈표 4-36〉 대상별 양적조사 분석결과 비교	89
〈표 4-37〉 민관협력에 대한 주제 분석	91
〈표 5-1〉 대상별 양적조사 결과 비교	115
〈표 5-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안)	120



•• 그림 차례 ••

<그림 2-1> 민관협력 모형	11
<그림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12
<그림 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구조	17
<그림 2-4> 복지공동체 구성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
<그림 2-5> 부산시 다복동 민관협력 구조	20
<그림 4-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47
<그림 4-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50
<그림 4-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52
<그림 4-4>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54
<그림 4-5>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56
<그림 4-6>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58
<그림 4-7>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61
<그림 4-8>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64
<그림 4-9>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66
<그림 4-10>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인력 직무만족도	67
<그림 4-1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71
<그림 4-1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73
<그림 4-1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75
<그림 4-1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만족도	76
<그림 4-1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80
<그림 4-1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82
<그림 4-1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84
<그림 4-1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	85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최근 복지제도 확충과 더불어 민관협력 방식이 보다 더 확산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 민관협력 사업 실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대전시 사업의 환경과 맥락을 검토한다.

둘째,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넷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민관협력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민관협력 사업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을 검토한다.

둘째,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성 및 운영현황, 사업 예산과 사업 내용, 각종 실적 등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정리한다.

셋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고, 설문지를 통한 양적분석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질적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양적조사, 질적조사,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수행하였다.

〈표 1-1〉 연구과정

단계	내용(일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진이 성과평가 연구계획과 연구방법 수립(2019. 5.)
선행연구 검토	관련 이론적 배경 등 선행연구 검토(2019. 6.)
설문지 구성 및 면접지 구성	양적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질적조사를 위한 면접지 구성(2019. 6.)
설문조사 실시 및 면접 실시	설문 실시 및 인터뷰 실시(2019. 7~8.)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2019. 9~10.)
자문회의 및 발간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및 보고서 발간(2019. 11.~12.)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관협력 개요

1. 민관협력의 개념

민관협력은 민간과 공공¹⁾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 영역의 자원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다양해진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민관협력의 개념은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복지 분야에서 민관은 효과적인 복지공급을 위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상호협력체계를 의미한다(함영진 외, 2016).

민관협력은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홍영준 외, 2017)된다.

2. 공공과 민간의 관계 모형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주체인 공공과 민간의 관계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의 형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다수의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형으로는 협력모형과 이종모형이 있다.

그 외에도 김승권 외(2014)가 제시한 공공주도 민관협력모형,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형,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 모형 등이 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사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군구 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

1) 민의 개념은 비영리 등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며, 의료·보건단체, 복지서비스 단체, 시민단체, 종교 단체, 협동조합 등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포함된다. 관의 개념은 정부 조직으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을 의미한다(함영진 외, 2016).



하고, 지역사회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자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사회 내 잠재적 사회보장자원 발굴,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사회보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한다.

추진배경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둘째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였다.

4. 민관협력의 쟁점

복지현장의 민관협력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누가 민관협력에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참여대상의 문제, 민관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인식의 문제, 그리고 민관협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민소영 외, 2018).

제2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민관협력사업 분석

1. 중앙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영역의 민관협력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03. 7월, 「사회복지사업법」)를 마련한 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활성화 수준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또 다른 것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2007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민관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제4기(2019-2022)까지 수립되는 기간 동안 일정 정도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었고, 이 과정 동안 민관협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된다.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만 4년이 되었다. 1기(2015-2018)의 경우, 주요 추진 방향과 내용을 보면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 주민중심의 행정혁신, 주민에 의한 마을의제 해결 등이며, 중앙정부 개편안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실효성 있는 인력충원과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병행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2년에 걸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복지관 협력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리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중에 복지관과의 민관협력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3. 부산시 다복동 사업

201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의 줄임말로 ‘자율과 소통, 협치를 바탕으로 한 민선 6기 시마을단위 통합복지 구현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대상사업은 동(洞)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 마을재생 등의 인프라 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중심 동단위 복지허브 구축 및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둔다.

제3장 대전시 민관협력사업 현황

제1절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및 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활성화 공모사업은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25개 거점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동-거점복지관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거점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사업비 지원)이다.

2. 세부 사업내용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경우, 5개 자치구는 특화사업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구-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경우, 25개 거점복지관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동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경우, 동-거점복지관 연계·협력 사업을 한다. 각각 주체들의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3-1>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세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특화사업)	사업예시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 구-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화합 워크숍, 공동사업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관계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리더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마을복지대학 ○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우체통 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치구 단위의 공동사업 기획 ○ 자원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복지지원 가이드북 발간 ○ 민관협력체계 구축

구분	사업내용(특화사업)	사업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관련 현장정책 개발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 사회보장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 구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및 조정 ○ 자치구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거점복지관 실무자 모임, 동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 사업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대회, 홍보영상 배포, 정보공유 블로그 운영, 캠페인
<p style="text-align: center;">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 동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연계 등 ○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운영 ○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이웃 발굴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활동 ○ 자생단체 및 지역사회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돌봄체계 구축·운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상자 발굴 및 협의체 활성화 홍보 ○ 동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sos함, 열로우 카카오톡(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안녕하세요(안부전화) 등 ○ 민관 공동 가정방문 및 찾아가는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심리상담, 신체적건강 문제 상담, 의식주 문제 상담 등 ○ 자원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조사, 마을자원 지도 만들기, 복지공동체 나눔활동(기업, 식당, 단체 연계) 등 ○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주민기획단, 기부데이(지역 단체 연계), 동-거점복지관 정기모임 운영, 자생단체협력 네트워크, 공동사례관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거점복지관 연계·협력 사업 	

3. 주체별 역할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3-2>와 같다.

<표3-2>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총괄(컨트롤타워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심의 대전복지재단의 민관협력을 위한 공공, 민간대상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지원 민관 협력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캠페인 추진 	
대전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관 :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구-동-거점복지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동장,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소통을 위한 간담회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성과평가 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자치구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홍보 및 예산지원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제·개정 추진 협의체 결속력 강화와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지원 공공기관장과 민간기관장의 협의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진행 거점복지관-동 연계활동 참여지원 민관협력 전담인력의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참여 연계 (전문·지원인력 역할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구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동-거점복지관 협력사업 계획수립 총괄 및 조정 동 협의체활동 지원(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민관협력 전담인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활동 확대
동 행정복지센터	동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협의체 위원 추천 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거점복지관과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거점복지관 전담인력과의 적극협력) 민관협력 전담인력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 참여 연계 (전문 지원인력 역할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마련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공동사례관리 참여지원 동-거점복지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민관협력 전담인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활동 확대 사·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거점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발굴 지원 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지원 자치구-동-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운영 및 협력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활동 참여 인력 지원 민관협력 전담 직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활동 참여 독려 민관협력 전담 직원의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제2절 사업 현황

□ 대전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차적으로 운영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치구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연평균 3천만원 내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도 6개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150명을 대상으로 약 26백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구별로 월 평균 약 200명과 약 400만원 정도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에 불과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수와 연계 실적이 높아서 평균이 상승한 효과이다. 따라서 중구의 실적을 제외하면 다른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이 훨씬 하향 평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개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의 경우, 2019년 연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평균 55.7% 수립한 반면 대덕구는 12개 동 모두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연간계획 수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연간계획 수립비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간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지원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지원 없이 대부분 공동모금회 및 중앙정부 모금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5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지원으로 나타나 향후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중구와 유성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자원발굴은 유성구를 제외하면 1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의 경우, 5개 자치구에 속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4장 민관협력 성과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분석틀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대전광역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이다.

2) 사업성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업성과는 공모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수준이 어떠한지를 사업성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사업성과 평가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서는 구 협의체 위원/전담인력/공무원 등을 설정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서는 동 협의체 위원/전담인력/슈퍼바이저/공무원 등을 설정하였다.

4) 성과 평가 방식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2가지를 병행하였다.

양적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양적인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질적조사는 양적인 조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2. 성과분석들

1) 양적조사

(1) 양적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대전광역시 추진한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의 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나.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지는 조사대상별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공통질문과 더불어 조사대상별로 개별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2019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296부가 회수되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4-3〉 조사대상별 내용

순번	조사대상	내용	비고
1	구 협의체 위원 설문지	구 위원들의 구 사업평가	
2	구 수행인력 설문지(전담인력, 공무원 공용)	구 관계자의 구 사업평가	
3	동 협의체 위원 설문지	동 위원들의 동 사업평가	
4	동 수행인력 설문지(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공용)	동 관계자의 동 사업평가	

2) 질적분석

(1) 질적조사 개요

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개요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초점집단면접 대상 및 질문내용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5개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79개 동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5개 구와 79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대전시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한 35개 거점복지관의 전담인력 및 슈퍼바이저와 자치구의 전담인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자들로 10개의 초점집단에 5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표 4-9〉 FGI 질문 구성

구분	탐색영역	질문
도입	연구 참여자들 간 소개 민관협력 경험에 대한 인식	민관협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참여는 어떠셨나요?
주요 질문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과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추진과정은 어떠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성과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공공/민간기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주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 무 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나요? 앞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토의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의견

제2절 양적조사 결과

1. 대상별 양적조사 설문결과 요약 및 비교

□ 대상별 양적조사 설문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6〉 대상별 양적조사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구 위원	구 수행인력 (전담인력, 공무원)	동 위원	동 수행인력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인식과 평가	3.99점	3.41점	3.64점	3.15점
공모 인식	3.94점	3.85점	3.66점	3.57점
평가	3.88점	3.88점	3.60점	3.58점
개선	4.18점	3.98점	3.77점	3.90점
만족도	-	3.64점	4.00점	3.53점
평균(개선 제외)	3.94점	3.70점	3.73점	3.46점

* 5점 만점(1점 매우부정, 2점 부정, 3점 보통, 4점 긍정, 5점 매우긍정)

- 구 협의체 위원들의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99점,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94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88점과 4.18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구 협의체 위원들의 평가는 5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3.94점으로 긍정 혹은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 협의체 수행인력인 전담인력과 공무원들의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41점,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85점, 평가와 개선방안의 경우는 평균 3.88점과 3.98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타나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구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과 공무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70점에 가까운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 협의체 위원들의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64점,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66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60점과 3.77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동 협의체 위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73점으로 4점에 가까운 긍정 혹은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 협의체 수행인력인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들의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15점,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57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58점과 3.90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동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46점에 가까운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동 협의회 위원들과 비교할 때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영역의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민관협력 활성화 성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구 협의체의 성과가 동 협의체의 성과보다 조금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질적조사 결과

□ 주제별 질적조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7〉 민관협력에 대한 주제 분석

주제	하위주제	주요내용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민관협력의 당위성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발굴과 민간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인식 • 다양한 체계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자원의 필요성 인식
	민관협력 사업간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또는 법률에 의거한 유사 민간 활동들의 중복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 민간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인식
기관별 역할수행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역할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도모하는 역할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주체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보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실무담당자의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민관협력사업 수행

주제	하위주제	주요내용
	지역사회조직 및 사례관리, 협업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복지관 - 사례관리를 통해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는 주요 주체로서 역할 • 자치구 전담인력 -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적인 책임성 담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성과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참여의 의미가 아닌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과 수행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기능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의미로 인식
	민과 관의 관계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체들의 정례화 된 회의를 통해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실질적인 협업관계로 인식 • 민, 관이 서로의 역할과 강점을 이해함으로써 민관협력 관계가 공고해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인 자원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경험을 통해 마을의 복지주체로서 인식 확장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동원이나 감독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참여의 주체로 의미를 가지게 됨
개선방안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역할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원과 새로운 활동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위원구성 필요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위인 ‘신청제’ 나 ‘추천제’ 등 공개적 참여 기회제공
	인력과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의 사업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배치 필요 • 전문적인 민관협력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위와 권한 보장 • 민관협력의 주요체개인 민간기관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 민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전형 평가체계 마련
	민관협력에 대한 방향과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민관협력 관련 사업들 간 조정을 위해 공론의 장을 통해 의견수렴 필요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민관협력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민관협력 성과 분석의 경우, 양적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구 위원의 점수가 3.94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 위원의 점수가 3.73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구 협의체 전담인력과 공무원, 동 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등의 순으로 점수가 제시 되었다. 위원들의 점수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전담인력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사업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협의체의 경우는 최근에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당수가 협의체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의 경우 만족도가 4.00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평가 개선에 대한 욕구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질적분석 결과의 경우,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영역에서 민관협력 과정은 다소 혼란이 있지만 당위성에 있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성과로는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변화, 민과 관의 관계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관과 함께하는 논의와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량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과제도 있다. 우선,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핵심적으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협의체의 역할 정상화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침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도 제시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였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영역에 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2절 제언

1. 총론: 민관협력 운영원칙에 따른 사업 추진

대전시 민관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민관협력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6대 운영원칙이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호호혜의 원칙, 상호의존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예산 적절성의 원칙 및 자율성의 원칙이 민관협력에서 적절히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전형 민관협력의 발전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민과 관이 교환하는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대전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전담팀을 모두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성의 원칙으로 각 동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의 주체들이 운영과 통제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방성의 원칙으로 민이 보다 관과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칭 ‘더불어 책상’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개방성의 원칙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산 적절성의 원칙으로 민관협력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자율성의 원칙으로 개별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민과 관에 대한 연합교육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첫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선과제로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4.14점), 사업비 확대(4.21점), 교육 확대(4.20점), 홍보 확대(4.27점) 등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 협의체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예산의 적절성(2.92점), 분과사업의 적절성(3.08점)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동 협의체 위원의 경우, 직무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0점을 나타내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개선과제에는 다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3.90점), 사업비 확대(3.97점), 교육 확대(3.91점), 홍보 확대(3.94점) 등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면,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동 협의체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동 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도의 영역에서, 직무보상이나 업무량 그리고 업무지장과 업무소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그에 비해 자부심(4.05점), 업무 중요성(3.95점) 등을 보면 일정 정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볼 수 있다. 적절한 지원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대전시와 재단에 대한 사업지원 평가에서는 구 협의체 위원은 각각 3.75점과 3.80점을, 구 협의체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은 3.62점과 3.77점을, 동 협의체 위원은 3.45점과 3.53점을 동 협의체 전담인력과 슈퍼바이저 그리고 공무원은 3.26점과 3.68점으로 나타나, 대전시와 재단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민관협력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며, 재단은 실무적 차원에서 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력배치라는 점에서 향후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은 아래와 같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표 5-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안)

구분	지역	목적	필요인력	비고
1단계	자치구 5개소	구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5명	1개구*1명
	거점복지관 35개소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35명	거점복지관*1명
2단계	자치구 권역별	구동 지사협 연계 및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강화	20명(a)	5개구*4권역*1명 상근간사
3단계	79개소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59명	79개동*1명-20명(a)

출처: 원종욱 외(2017)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

1단계로 구 협의체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구별 사무국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동 협의체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복지관에 동 단위 협의체와

민관협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성과 역량있는 정규 수행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3개년 시범사업 이후에도 민관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단계는 구동 지사협 연계 및 동 지사협 역할 강화를 위해 1개구 4권역별로 1명씩 총 20명의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모든 동에 지사협 역할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인원을 제외한 총 59명의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민관협력의 핵심적인 기제로 구-동 협의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전형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및 대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인식조사’ (송지현 외, 2019) 결과에 의하면, 대전시 복지현장의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형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타시도와 다른 대전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민관협력 단계는 초기 수준으로 여전히 형식적 제도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민관협력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1) 민관협력의 확산

2000년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가 더욱 확대되었고 공공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2015년에 와서는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초기 목적은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공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맞춤형 복지 제공, 지역단위 복지거버넌스 기능,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안전망,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인 측면의 강화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국가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하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의 초점을 주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변경시켰고, 4대 대표사업인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는 공통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개편을 시도하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단순히 민간이라고 지칭되던 영역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이라는 보다 일상적인 주체의 참여까지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사업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주민력’이다.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시행으로 민과 관이 보다 더 밀착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지역 내 돌봄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계이므로 이 체계내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민간협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이 실제로 작동되는 실태와 환경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오랜 기간 동안 공공주도적 혹은 관주도적 협력관계가 지속되었기에 바람직한 민관협력 관계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분담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운영 수준은 낮다는 평가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민관협력의 확산에 따른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대전광역시 민관협력사업의 평가 필요성

대전광역시는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기점으로 민관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전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정득 외, 2012)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민관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후 희망티움센터 운영 (2013)을 통해 이를 더욱 체계화하였고, 이후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변화에 발맞춰 동북지지원단을 설치(2017)하여 민관협력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김지영 외, 2017)를 통해 민간의 대표적인 복지기관인 복지관을 대전시의 중요한 복지자산으로 보고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추진체계(안)’을 마련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거점복지관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거점복지관을 활용하여 동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민관협력 슈퍼바이저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민관협력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모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5개소에 인력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거점복지관 10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기간 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업 확대를 위한 중간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여 인력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동-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 첫째,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대전시 사업의 환경과 맥락을 검토한다.
- 둘째,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 셋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 넷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민관협력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민관협력 사업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을 검토한다.

둘째,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성 및 운영현황, 사업 예산과 사업 내용, 각종 실적 등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정리한다.

셋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고, 설문지를 통한 양적분석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질적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양적조사, 질적조사,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민관협력 전반을 살펴보고자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대전시 민관협력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5개 자치구 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양적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성과 분석을 위해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관계자를 주체별로 구분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지 작성 및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자문회의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표 1-1〉 연구과정

단계	내용(일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진이 성과평가 연구계획과 연구방법 수립(2019. 5.)
선행연구 검토	관련 이론적 배경 등 선행연구 검토(2019. 6.)
설문지 구성 및 면접지 구성	양적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질적조사를 위한 면접지 구성(2019. 6.)
설문조사 실시 및 면접 실시	설문 실시 및 인터뷰 실시(2019.7~8.)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2019.9~10.)
자문회의 및 발간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및 보고서 발간(2019. 11.~12.)

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관협력 개요

1. 민관협력의 개념

민관협력은 민간과 공공¹⁾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 영역의 자원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다양해진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경험은 근래에 본격화되었다.

민관협력의 개념은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복지 분야에서 민관은 효과적인 복지공급을 위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상호협력체계를 의미한다(함영진 외, 2016).

복지국가 발전 과정을 보면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왔으나 공공의 획일성과 경직성이 비판되었고, 특히나 경제 위기 이후 복지재정이 축소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복지욕구의 다양화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는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복지혼합(welfare mixed) 개념은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국가, 민간, 지역, 비공식 복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관협력은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홍영준 외, 2017)되거나, ‘정부, 비영리조직,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주체들이 협력적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 및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함영진 외, 2016). 특히 민관협력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을 토대로 한 사군구 단위나 읍면동 단위가 중요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1) 민의 개념은 비영리 등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며, 의료·보건단체, 복지서비스 단체, 시민단체, 종교 단체, 협동조합 등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포함된다. 관의 개념은 정부 조직으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을 의미한다(함영진 외, 2016).

2. 공공과 민간의 관계 모형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과 민간의 관계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의 형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다수의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형으로는 협력모형과 이중모형이 있다.

〈표 2-1〉 공공과 민간의 관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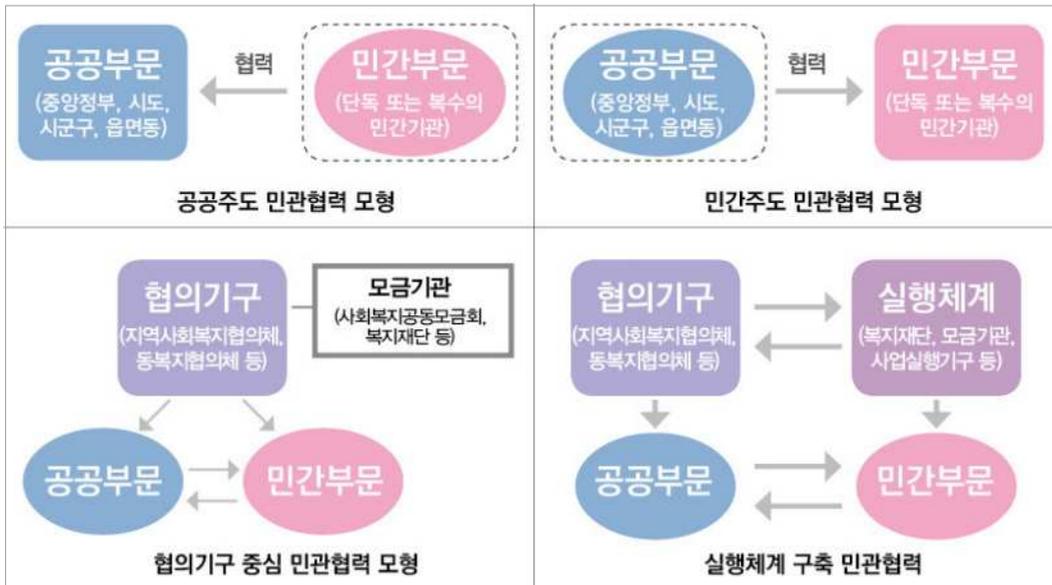
	협력(collaborative) 모형		이중(dual) 모형	
개념	①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가정 (상호 협조 내지는 공조) ② 민관이 실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대리(대행)자 모형과 동반자 모형으로 구분		① 공공과 민관이 일정한 역할을 뚜렷하게 분리해서 갖고 있음 ② 역할과 기능 수행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섞이지 않고 병렬적으로 기능함	
모형 명칭	협력적 대리(대행)자 모형 (collaborative-vendor)	협력적 동반자 모형 (collaborative-partner)	병렬적 보충모형 (parallel supplement)	병렬적 보완모형 (parallel complement)
기본 전제	• 공조자와 민간조직의 특성상 공공조직은 재원의 조달에, 민간조직은 급여의 생산 및 제공에 더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공공과 민간의 쌍방적 관계이며, 각각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가질 때 문제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직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로부터 제외되는 복지수요자(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복지 수요자의 욕구는 다중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공주체가 복지 수요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 필요 요소	재원의 의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방지, 관료화 방지	자율성과 재량권 책무성, 현실 적합성	민간의 자원동원 능력, 중복 자원의 예방 (사려관리적 접근)	
키워드	협력적 대리(대행)자	협력적 파트너	보충(추가)	보완
자원 조달책임	공공	공공	공공/민간	공공/민간
급여 제공책임	민간	민간	공공/민간	공공/민간
협력 시점	자원 배분 시	전 과정	급여 대상자 결정시	급여 내용 결정시
공공·민간의 급여대상	-	-	다름(공공 : 법정대상 / 민간 : 사각지대)	동일
공공·민간의 급여내용	-	-	동일	다름 (공공 : 현금급여, 민간 : 서비스)
공공·민간의 관계	민간은 공공의 대리(대행)인	상호 쌍방적 영향	급여대상에 대해 상호보완적	급여내용에 대해 상호보완적

출처: 김영중 외(2007), 이태수 외(2010)를 참고한 함영진 외(2016)의 재구성을 편집함

이 모형에 따르면, 협력모형은 민관의 협력적 관계를 가정하고 민간이 관에 있어서 실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대리(대행자) 모형과 동반자 모형으로 구분된다.

이중모형은 민과 관이 일정한 역할이 완전히 구분될 수 있어, 이 두 기관유형은 서로 병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모형에서는 보충(추가) 모형과 보완 모형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김승권 외(2014)가 제시한 공공주도 민관협력 모형,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형,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 모형 등이 있다.



〈그림 2-1〉 민관협력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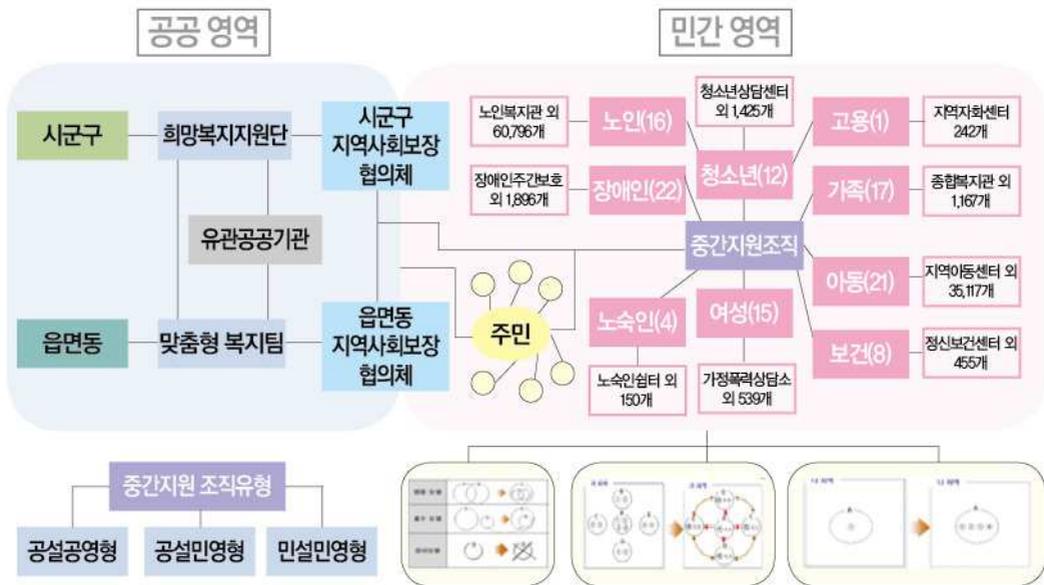
출처: 김승권 외, 2014

공공주도 민관협력은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민간주도 민관협력은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은 복지재단이나 혹은 사업실행기관 등 독립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행정과 민간을 연계하는 역할을 구현한 형태이다.

이를 볼 때, 본 보고서의 대전시 민관협력 형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에 주로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형태로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민관협력의 핵심기구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민관협력의 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복지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력이 대표적이다.



〈그림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출처: 원종욱 외(2019)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자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사회 내 잠재적 사회보장자원 발굴,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사회보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01. 10월 ~ '02. 11월)를 기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03. 7월, 「사회복지사업법」), 법 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04. 5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 대책 마련('05. 2월) 등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민관협의체 통합 지침을 시행('08. 7월)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근간사 TF를 운영('12. 1월~)하였다.

〈표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계	92,294	229	5,715	227	5,813	225	20,362 (2,059분과)	229 (3,488읍면동)	60,404

* 평균 참여인원 :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6명, 실무분과 90명, 읍면동 단위 협의체 17명(2017.12.31. 현재)

〈표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의거 다음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함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한다.

추진배경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둘째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였다.

위원의 구성 및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4. 민관협력의 쟁점

복지현장의 민관협력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누가 민관협력에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참여대상의 문제, 민관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인식의 문제, 그리고 민관협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민소영 외, 2018).

첫째, 공공은 ‘읍·면·동’이 형식적으로 주체가 되지만 읍·면·동의 수준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가진 특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민간의 경우, 복지관을 순수한 민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현장에서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 외 주민의 경우는 주요한 민관협력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불특정 다수라는 측면에서 결국 특정 조직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민관협력의 기본적 원리를 살펴보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자율성과 상호호혜에 기반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공공의 요청에 따른 혹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민관협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각론은 각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민관협력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셋째, 민관협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민관협력은 단순히 연계하고 관계하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공공과 민간이 완전히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협력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수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개별 기관의 입장이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협력에 따른 지원, 업무조정, 평가, 성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이 필요하기에 이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된다.

제2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민관협력사업 현황

1. 중앙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영역의 민관협력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03. 7월, 「사회복지사업법」)를 마련한 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활성화 수준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또 다른 것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2007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민관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제3기(2015-2018), 제4기(2019-2022)까지 수립되는 기간 동안 일정 정도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었고, 이 과정 동안 민관협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은 주로 공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다가(2014년 공공 30개 지역+민간 5개 기관, 2015년 공공 30개 지역+ 민간 10개 기관) 2016년부터 공공 주도형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통합되고, 민간 중심형으로 10개 기관이 추진되었다. 10개 기관은 복지관이 8개소, 복지재단이 1개소,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 1개소가 참여하여 실시되었고, 관련 보고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복지지원 발굴 체계, 지역별 특화사업 체계 등을 분석하였다(함영진 외, 2017). 이를 보면 민관협력은 민간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심이 되는 조직은 복지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된 관심사는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자원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시기별 전달체계 개편안에서도 민관협력은 강조되어 왔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3-2005)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2007-2015)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주요한 협력 네트워크로 상정하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2012~)을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강조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2016-2017)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은 공공성 확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민간 영역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게 하였다. 개편안은



기존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역사회조직, 상담, 방문서비스 등 그동안 민간의 전유물로만 인정되던 업무들을 공무원에 의해 공공에서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민간의 차별성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김이배, 2016). 민간의 정체성 시비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복지허브화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공공의 확대에 대해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민간에서는 민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하의 민관협력은 기존 민관협력이 주로 복지영역의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읍면동 허브화의 연속선상에서 주민자치 혹은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를 가진다. 개편안의 이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명명하고 있고, 개편의 한 축은 ‘주민자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만 4년이 되었다. 1기(2015-2018)의 경우, 주요 추진 방향과 내용을 보면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 주민중심의 행정혁신, 주민에 의한 마을의제 해결 등이며, 중앙정부 개편안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실효성 있는 인력충원과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병행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단순한 복지전달체계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소 복합적인 목표를 상정하고 있고 그렇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개편안으로 이해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의 구성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3>,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구조

출처: 서울특별시.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민관협력 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사례관리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2-4〉 복지공동체 조성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처: 서울특별시.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론



민관협력의 주요 기구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공동체 조성 사업의 하위 구조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복지생태계 구축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마을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였다.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민관협력과 연결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민관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에 의해 마을의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향성은 명확하다. 논쟁지점 중의 하나는 마을과 복지를 연계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역복지의 배경을 가지고 두 영역간의 연계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제시된다(김이배, 2018).

다른 영역으로는 통합사례관리 영역이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연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공공은 일반적인 사례관리에 민간은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의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초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이 있었지만 유사조직인 나눔 이웃이나 마을 등에 비해 존재감이 적었다고 평가된다.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변 단체적 성격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초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끌고 갈만한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주민주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였다.

서울시는 서울복지거버넌스라는 민관협력기구를 복지영역의 최상위에 설립(2014. 1)하고 여러 영역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서울시 복지를 만드는 세 주체인 시של운영자(법인), 현장실무자, 행정담당자(공무원)들의 동일한 비율 참여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2014년 12월 기준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포럼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연중 10개 분과(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여성복지, 아동, 외국인주민, 가족, 보육, 정신보건)에서 137명 위원(분과별 15명 이내)이 활동하였다.

구체적인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2년에 걸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인 2018년에는 6개 지역에서 동주민센터와 민간복지관과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 2차년도에는 12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민관협력의 원칙(상호호혜, 상호의존, 민주성, 개방성, 예산 적절성, 자율성)에 따라 민관협력 성과를 2017년에 평가하였고, 2018년 연구에서는 사업이 지역조직화와 사례관리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기에 각각의 협력 실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 모델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중에 복지관과의 민관협력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3. 부산시 다복동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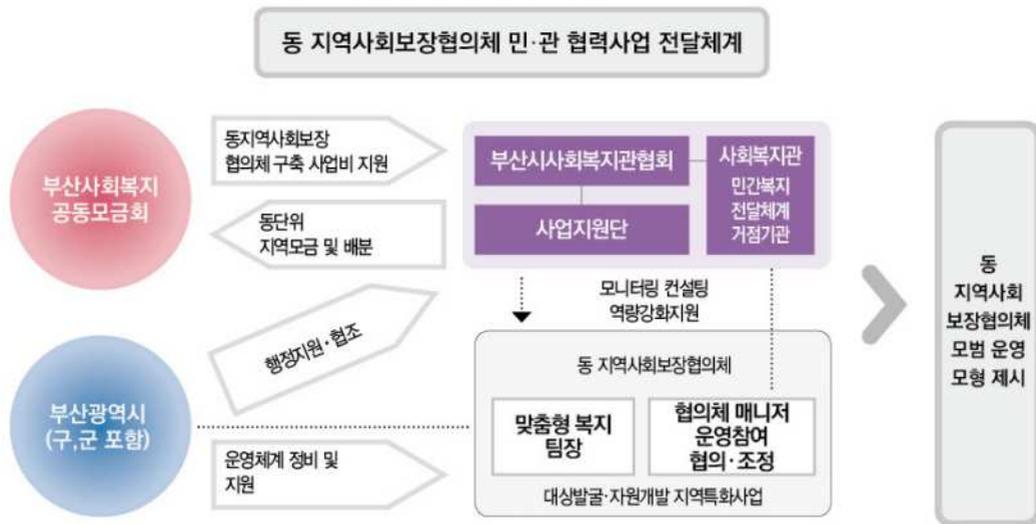
201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의 줄임말로 ‘자율과 소통, 협치를 바탕으로 한 민선 6기 마을단위 통합복지 구현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대상사업은 동(洞)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 마을재생 등의 인프라 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중심 동 단위 복지허브 구축 및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둔다. 복지영역에서의 추진과제는 크게 찾아가는 복지실현,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조성 등이다. 다복동 사업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을 2015년 시정경영진단 전략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련 특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매니저로 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며(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2017),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2차년도에 와서는 복지영역 외 마을재생(2), 주거복지(9), 물복지(2), 에너지복지(3), 교육복지(4) 등 총 20개의 사업이 패키지화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업 확대는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정체성이 모호한 방식이라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복동광역지원단(<http://hub.baswc.org/>)은 2018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운영방향이 적절한가? 라는 의문들이 있다. 공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지역 내 주민조직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관의 3대 사업 중 하나인 주민조직화 사업이 위협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이 하는 영역에 민간이 과도하게 개입하므로 민간이 가진 본래의 강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간이 추구하는 주민조직화의 성격은 공공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른바 영역투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지역 내 물적 토대를 가진 민관협력기관(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독점에 대해 민간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바라본다. 또한 매니저의 특성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무엇보다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후 다복동광역지원단이 2018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주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2018년 9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복동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국제신문, 2018. 8. 31).

다복동 사례는 기존에 공공이 민간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였다는 것과 이를 통해 민간이 구와 읍면·동 협의체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광역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정 정도 체계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환경 변화에 민관협력 구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민관협력 관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함의를 제공한다.



〈그림 2-5〉 부산시 다복동 민관협력 구조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 현황



제3장 대전시 민관협력사업 현황

제1절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및 방향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를 통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며, 거점복지관을 활용하여 동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연계·협력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2018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및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¹⁾)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25개 거점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²⁾)으로 구분된다. 한편,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동-거점복지관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거점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사업비 지원³⁾)이다.

2. 세부 사업내용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경우, 5개 자치구는 특화사업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구-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25개 거점복지관을 주축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동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10개 거점복지관에서

1) 구별 1인 * 3,700천원*12개월/구별 사업비 최대 20,000천원

2) 거점복지관 기존 2차 년도 기관별 1인 * 3,700천원*12개월/구별 사업비 최대 6,000천원

거점복지관 신규 1차 년도 기관별 1인 * 2,800천원*10개월/구별 사업비 최대 5,000천원

3) 기관별 사업비 최대 4,000천원

동-거점복지관 연계·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각각 주체들의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세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특화사업)	사업예시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 구-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화합 워크숍, 공동사업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 등 ○ 연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관련 현장시책 개발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 사회보장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 구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및 조정 ○ 자치구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관계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리더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마을복지대학 ○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우체통 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한 자치구 단위의 공동사업 기획 ○ 자원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복지자원 가이드북 발간 ○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거점복지관 실무자 모임, 동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 사업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대회, 홍보영상 배포, 정보공유 블로그 운영, 캠페인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 동 단위 자원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연계 등 ○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운영 ○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이웃 발굴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활동 ○ 자생단체 및 지역사회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발굴/자원/돌봄체계 구축·운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상자 발굴 및 협의체 활성화 홍보 ○ 동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SOS함, 옐로우 카카오톡(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안녕하세요(안부전화) 등 ○ 민관 공동 가정방문 및 찾아가는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심리상담, 신체적건강 문제 상담, 의식주 문제 상담 등 ○ 자원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조사, 마을자원 지도 만들기, 복지공동체 나눔활동(기업, 식당, 단체 연계) 등 ○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주민기획단, 기부데이(지역 단체 연계), 동-거점복지관 정기모임 운영, 자생단체협력 네트워크, 공동사례관리 등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점복지관 연계·협력 사업 	

3. 주체별 역할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대전광역시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둘째, 대전복지재단은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며, 거점복지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과 컨설팅 등 전문적 지원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셋째, 자치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동-거점복지관 계획수립을 총괄 및 조정하며,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기획·운영하여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넷째, 동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마련, 발굴한 대상자에게 공적·민간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거점복지관은 동 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체별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총괄(컨트롤타워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심의 • 대전복지재단의 민관협력을 위한 공공, 민간대상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지원 • 민관 협력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캠페인 추진 	
대전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관 :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 구-동-거점복지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동장,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소통을 위한 간담회 •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성과평가 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자치구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및 예산지원 •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제·개정 추진 • 협의체 결속력 강화와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지원 • 공공기관장과 민간기관장의 협의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진행 • 거점복지관-동 연계활동 참여지원 • 민관협력 전담인력의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참여 연계 (전문·지원인력 역할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역 활	
	구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거점복지관 협력사업 계획수립 총괄 및 조정 • 동 협의회활동 지원(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민관협력 전담인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활동 확대
동 행정복지센터	동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회 위원 추천 • 동 협의회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 거점복지관과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거점복지관 전담인력과의 적극협력) • 민관협력 전담인력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활동 참여 연계 (전문 자원인력 역할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복지협의회 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마련 •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지원 발굴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공동사례관리 참여지원 • 동-거점복지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 민관협력 전담인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활동 확대 • 시-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거점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발굴 지원 • 동-거점복지관 연계,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지원 • 자치구-동-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운영 및 협력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활동 참여 인력 지원 • 민관협력 전담 직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계 활동 참여 독려 • 민관협력 전담 직원의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4. 2019년 동-거점복지관 매칭 현황

2019년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동-거점복지관 매칭현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동-거점복지관 매칭 현황

복지관명		매칭동	
동구 (10)	종복	생명종합사회복지관	■판암2동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동 ■성남동
		판암사회복지관	■판암1동 ■대청동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용운동 ■자양동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산내동
	노복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기양2동 ■기양1동 ■용전동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판암1동 ■신인동
	장복	밀알복지관	■삼성동 ■홍도동
		동구아름다운복지관	■효동
		대전광역시립소리복지관	■중앙동
중구 (6)	종복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은행선화동 ■용두동 ■태평1동
		중촌사회복지관	■목동 ■중촌동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장복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산성동 ■태평2동
서구 (9)	종복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갈매2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갈매1동 ■월평1동 ■월평2동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복수동 ■도마2동 ■정림동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용문동 ■괴정동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노복	유등노인복지관	■변동 ■내동 ■도마1동
		서구노인복지관	■탄방동 ■가장동
장복	행복한우리복지관	■가수원동	
유성구 (4)	종복	송강사회복지관	■구죽동 ■노은3동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지잠동 ■임신흥동 ■온천1동 ■온천2동
	장복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대덕구 (6)	종복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신탄진동 ■덕암동 ■석봉동 ■목상동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비래동 ■송촌동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법1동 ■중리동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법2동
	노복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회덕동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오정동 ■대화동



제2절 사업 현황

1.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석결과(2019.6.30일 기준)

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은 평균적으로 26.4명으로, 대덕구가 37명으로 협의체 위원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동구가 2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의 대표가 50% 내외일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회의개최 실적은 1~3회 정도로 나타났다(평균 2회정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4>과 같다.

<표 3-4>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구성 및 운영현황

구분	구성원 현황 소개(명)	위원 위촉 현황 ⁴⁾					회의 개최 실적		
		A	B	C	D	E	연간 회의 개최 실적	서면 회의 개최 실적	대면 회의 개최 실적
동구	20	3	9	2	-	6	1	1	-
중구	26	2	12	8	1	3	1	-	1
서구	25	6	16	-	-	3	3	3	-
유성구	24	3	18	-	-	3	3	1	2
대덕구	37	1	21	-	11	4	2	1	1
평균	26.4	-	-	-	-	-	2.00	-	-

2) 운영예산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은 평균 8천 6백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인건비가 약 4천 7백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유성구가 약 1억 15백만원으로 가장 예산이 많은 반면 동구가 약 7천만원으로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4) A: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B: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 대표자, C: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D: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E: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표 3-5〉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단위: 천원)

구분	소계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동구	70,549	1,900	41,790	26,859
중구	80,570	8,570	42,000	30,000
서구	73,688	1,900	41,788	30,000
유성구	115,656	10,030	68,126	37,500
대덕구	92,722	21,172	41,550	30,000
평균	86,637	8,714.4	47,050.8	30,871.8

3) 심의 및 자문 건수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자문 건수는 평균적으로 4.6건으로,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8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자문 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6>와 같다.

〈표 3-6〉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자문 건수

구분	소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사행 및 평가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보장사업 에 관한 사항
동구	2	1	-	-	-	1	-
중구	2	-	-	-	1	1	-
서구	5	2	-	-	-	-	3
유성구	6	1	1	1	1	2	-
대덕구	8	2	-	5	-	-	1
평균	4.6	-	-	-	-	-	-

4)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단위: 명, 천원)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은 약 1,150명을 대상으로 약 2천 6백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 등 연계 실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중구가 4,486명을 대상으로 약 7천 3백만원 정도의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을 보인 반면, 대덕구는 140명을 대상으로 약 180만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7>와 같다.

<표 3-7>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

구분	소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보건·의료연계		민간(7만 단위기업) 등연계		민간(개인) 후원실적	
	대상자	금액	대상자	금액	대상자	금액	대상자	금액	대상자	금액
동구	970	9,183	-	-	-	-	970	9,183	-	-
중구	4,486	73,000	3,565	142,000	56	120,000	465	47,000	400	4,000
서구	148	40,214	119	5,374	-	-	29	34,840	-	-
유성구	20	9,376	-	-	-	-	-	-	20	9,376
대덕구	140	1,880	140	1,880	-	-	-	-	-	-
평균	1,152	26,730	-	-	-	-	-	-	-	-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석결과(2019.6.30일 기준)

1) 일반현황

5개 자치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연간계획 수립비율은 약 55.7%로 나타났는데, 유성구는 100% 수립비율을 보인 반면, 대덕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의체 운영세척 마련 비율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100%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

구분	동수	19년 연간계획		협의체 운영세척	
		수립 동수	수립비율(%)	미련 동수	미련비율
동구	16	10	62.5	15	93.4
중구	17	5	29.4	17	100
서구	23	20	86.7	23	100
유성구	11	11	100	11	100
대덕구	12	-	-	12	100
평균	-	-	55.72	-	98.68

2) 참여 인원

5개 자치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인원은 평균적으로 282.6명으로, 동 수가 가장 많은 서구(23개 동)가 38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 수가 가장 적은 유성구(11개 동)가 18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 인원의 신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복지 기관 및 시설 종사자, 공무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및 자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인원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9>과 같다.

〈표 3-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인원

구분 ⁵⁾	소계	A	B	C	D	E	F	G	H	I	J	K	L
동구	266	31	41	37	36	37	4	5	3	28	17	-	27
중구	330	35	54	55	20	46	5	12	5	32	8	-	58
서구	388	39	62	61	36	30	3	2	1	64	7	-	83
유성구	188	46	11	27	8	18	5	2	10	17	2	1	41
대덕구	241	69	29	18	10	14	11	8	19	31	4	-	28
평균	282.6	-	-	-	-	-	-	-	-	-	-	-	-

3) 예산지원

5개 자치구의 동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예산지원은 동구만 있으며 약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모금회,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은 약 2천 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덕구가 약 4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0>과 같다.

5) A: 복지기관, 단체 및 시설 종사자, B: 공무원, C: 통리장, D: 주민자치위원, E: 자영업자(상가변영 회원 등), F: 종교인, G: 의료인, H: 교육복지관계자(교사 등), I: 자원봉사 단체회원, J: 부녀회장, K: 우체국관계자, L: 기타 지역주민



〈표 3-1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단위: 천원)

구분	사군구 지원	기타 지원	소계
동구	30,874	27,650	58,524
중구	-	15,012	15,012
서구	-	38,730	38,730
유성구	-	4,000	4,000
대덕구	-	40,285	40,285
평균	-	25,135	-

4) 회의 운영 및 안건

5개 자치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에 대해 살펴보면, 회의 개최는 평균적으로 52.2건으로 동 수가 가장 많은 서구(23개 동)가 81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 수가 가장 적은 유성구(11개 동)가 34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참여인원은 평균적으로 624.4명으로 서구가 935명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35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 안건은 평균적으로 153건으로, 지역자원발굴·연계(평균 37.8건), 사각지대 발굴조사(평균 33건),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평균 27.4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1>과 같다.

〈표 3-1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

구분	회의개최(회)	참여자(명)	소계	안건 ⁶⁾						
				A	B	C	D	E	F	G
동구	53	644	232	8	4	26	83	55	35	21
중구	49	637	158	5	4	41	32	35	15	26
서구	81	935	189	6	9	42	25	39	38	30
유성구	34	354	70	4	1	4	11	10	23	17
대덕구	44	552	116	1	-	13	14	50	26	12
평균	52.2	624.4	153	4.80	3.60	25.20	33.00	37.80	27.40	21.20

6) A: 운영세칙마련 및 변경, B: 위원장 선출, C: 복지대상자지원결정(지원방안), D: 사각지대발굴조사, E: 지역 자원발굴 및 연계, F: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G: 그 외 지역복지 관련사항

5)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

5개 자치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발굴은 약 1,457건, 민간 자원발굴은 약 1억 26백만원, 자원발굴 건 수는 약 490건, 서비스연계는 약 7,600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사각지대 발굴은 대덕구가 약 2,500건으로, 민간 자원발굴은 중구가 약 1억 8천만원으로, 자원발굴 건 수는 서구가 약 990건으로, 서비스 연계는 동구가 약 16,00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단위: 천원)

구분	사각지대 발굴 건수	민간자원발굴		서비스연계(건)
		자원발굴(금액)	자원발굴(건)	
동구	1,482	171,787	627	16,376
중구	625	182,397	355	5,536
서구	2,123	132,439	991	10,278
유성구	530	23,283	65	481
대덕구	2,525	124,856	415	5612
평균	1,457	126,952	490	7,656



제3절 소결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차적으로 운영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치구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연평균 3천만원 내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도 6개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150명을 대상으로 약 26백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구별로 월 평균 약 200명과 약 400만원 정도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에 불과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수와 연계 실적이 높아서 평균이 상승한 효과이다. 따라서 중구의 실적을 제외하면 다른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이 훨씬 하향 평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개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의 경우, 2019년 연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평균 55.7% 수립한 반면 대덕구는 12개 동 모두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연간계획 수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연간계획 수립비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간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지원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지원 없이 대부분 공동모금회 및 중앙정부 모금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5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지원으로 나타나 향후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중구와 유성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자원발굴은 유성구를 제외하면 1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의 경우, 5개 자치구에 속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장

민관협력
성과 분석



제4장 민관협력 성과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분석틀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이다.

〈표 4-1〉 공모사업 유형

공모사업 유형	대상	지원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자치구 5개소	인건비, 사업비
	거점복지관 25개소	인건비, 사업비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복지관 10개소	사업비

2) 사업성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업성과는 공모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수준이 어떠한지를 사업성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

공모사업 유형	대상	사업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활성화	자치구 5개소	인력과 사업비 투입에 따른 구 협의체 활성화 수준
	거점복지관 25개소	인력과 사업비 투입에 따른 동 협의체 활성화 수준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복지관 10개소	사업비 투입에 따른 동 협의체 활성화 수준



3) 사업성과 평가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서는 구 협의체 위원/전담인력/공무원 등을 설정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서는 동 협의체 위원/전담인력/슈퍼바이저/공무원 등을 설정하였다.

4) 성과 평가 방식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2가지를 병행하였다.

양적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양적인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질적조사는 양적인 조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2. 성과분석틀

1) 양적조사

(1) 양적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의 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나. 조사 분석틀

○ 조사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진 설문지 초안 구성 → 관계자 문항 검토 → 설문 구성 합의 및 구성 완료 절차를 거쳐 조사 분석틀의 완성도를 높였다.

○ 분석 구조는 논리모델을 따라, ‘투입-과정-산출’의 틀을 구성하였다. 변수 설정에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요 변수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 투입: 참여인력, 사업비 적절성

- 과정: 의제발굴, 대표사업(3개) 추진과정의 우수성(적절성), 협력기관과의 관계, 교육 및 홍보, 운영매뉴얼

- 성과: 사각지대 발굴 사업, 자원발굴(금액) 및 연계, 대표사업(3개) 추진결과의 우수성(적절성), 동 협의회 운영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사연구, 우수사례 확산 등

다.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지는 조사대상별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공통질문과 더불어 조사대상별로 개별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2019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296부가 회수되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4-3〉 조사대상별 내용

순번	조사대상	내용	비고
1	구 협의회 위원 설문지	구 위원들의 구 사업평가	
2	구 수행인력 설문지(전담인력, 공무원 공용)	구 관계자의 구 사업평가	
3	동 협의회 위원 설문지	동 위원들의 동 사업평가	
4	동 수행인력 설문지(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공용)	동 관계자의 동 사업평가	

○ 조사대상별 설문지의 양적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4-4〉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 수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규모,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지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 협의회)	16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회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기타활동)	20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10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직위, 활동기간, 활동지역	7

둘째, 자치구 수행인력(전담인력, 공무원)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설문 :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평가와 개선방안
- 구분 설문 : 직무만족도 등

〈표 4-5〉 구 수행인력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수
직무만족도	- 보상, 관계, 업무량, 업무지장, 소진, 중요성, 발전성, 전문성, 자부심, 만족도	10
응답자 특성	- 소속, 성별, 연령, 학력, 전공, 활동기간, 활동지역, 공모참여시기, 직급, 직렬	10

셋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4-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수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수준,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자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	13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체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슈퍼바이저)	20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10
직무만족도	- 성취감, 자부심, 중요성, 가치, 권유	5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활동기간, 동기, 위원자격, 활동지역	7

넷째, 동 수행인력(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설문: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평가와 개선방안
- 구분 설문: 직무만족도 등

〈표 4-7〉 동 수행인력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질문내역	질문수
직무만족도	- 보상, 관계, 업무량, 업무지장, 소진, 중요성, 발전성, 전문성, 자부심, 만족도	10
응답자 특성	- 소속, 성별, 연령, 학력, 전공, 활동기간, 활동지역, 공모참여 시기, 직급, 직렬	10

2) 질적조사

(1) 질적조사 개요

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개요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연구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혹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이 초점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Stewart et al, 200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로 민관협력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민관협력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2017년부터 거점복지관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 및 효용에 대한 양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체들을 통한 현장중심형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79개 동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5개 자치구와 79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대전시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한 35개 거점복지관의 전담인력 및 슈퍼바이저와 자치구의 전담인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였고, 초점집단은 자치구별로 고르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목적과 방법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로 10개의 초점집단에 50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초점집단면접 구성과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8>와 같다.

<표 4-8> FGI 구성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그룹	ID	연령	성별	복지전공	민관협력 경력	주된 활동
FGI 1	A-1	49	남	x	0년	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A-2	53	여	o	2년	희망복지지원단
	A-3	39	여	o	6개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4	33	여	o	4년	민관협력사업,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A-5	41	여	o	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FGI 2	B-1	57	남	o	10년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일자리
	B-2	44	여	o	5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사례관리 등
	B-3	45	남	o	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B-4	37	여	o	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B-5	30	여	o	1년 6개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담당
FGI 3	B-6	52	여	o	2년	복지전담팀 총괄
	B-7	51	여	o	6개월	사회복지행정, 사례관리
	B-8	42	여	o	6개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B-9	40	여	o	1년	사례관리
	B-10	50	여	x	2년	복지전담팀
FGI 4	C-1	49	여	o	3년	지역복지
	C-2	52	남	o	5년	지역복지
	C-3	53	여	x	5년	노인복지
	C-4	58	남	o	12년	노인복지
	C-5	53	여	o	1년	장애인복지
FGI 5	D-1	40	여	x	4년	봉사단체 (여성범범대장, 아동위원)
	D-2	62	여	x	3년	봉사단체 (부녀회, 의용소방대, 여성단체)
	D-3	56	여	o	2년	아동활동가
	D-4	52	여	x	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FGI 6	D-5	-	남	x	3년	자원봉사협의회
	D-6	49	남	x	2년	-

그룹	ID	연령	성별	복지전공	민관협력 경력	주된 활동
	D-7	55	남	x	3년	목회
	D-8	62	남	x	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D-9	50	여	x	3년	통장
	D-10	62	남	x	5년	복지분야 봉사활동
FGI 7	E-1	43	남	o	3년	지역복지
	E-2	48	여	o	2년	장애인복지
	E-3	48	여	o	2년	장애인복지
	E-4	52	여	o	2년	장애인복지
	E-5	42	여	o	5년	지역복지
FGI 8	F-1	36	남	o	1년 6개월	장애인복지
	F-2	55	여	o	2년	지역복지
	F-3	38	남	o	2년	지역복지
	F-4	40	남	o	3년 6개월	지역복지
	F-5	38	여	o	2년	장애인복지
FGI 9	G-1	28	여	o	1년	노인복지
	G-2	28	여	o	1년	지역복지
	G-3	37	여	o	1년	지역복지
	G-4	48	여	o	1년	지역복지
	G-5	50	여	o	1년	지역복지
FGI 10	H-1	53	여	x	1년	사회복지시설
	H-2	39	여	x	3개월	청소년 및 복지시설
	H-3	35	여	o	1년	다문화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H-4	37	여	o	1년	노인복지 및 사례관리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초부터 2주간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각 집단별로 1회씩 실시하였고,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진술된 정보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알렸고,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여 연구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중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후 참여자들 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토의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토의 중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부연하여 설명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인터뷰 도중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메모하고 비언어적인 것은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Krueger 와 Casey (2009)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고려하여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4-9〉 FGI 질문구성

구분	탐색영역	질문
도입	연구 참여자들 간 소개 민관협력 경험에 대한 인식	민관협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참여는 어떠셨나요?
주요 질문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과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추진과정은 어떠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성과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공공/민간기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무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나요? 앞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토의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의견

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Krueger(1998)가 제시한 체계적인 분석과정에 근거하여 연구 시작 시기, 포커스 그룹 도중,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의 4단계 지침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 시작 시기에서 연구진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주요 질문과 하위 질문을 결정하고, 연구진의 검토를 거쳤다. 2단계에 연구진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여 경청하고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내용을 수정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에 연구진은 토론 중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는 것, 기대와 달랐던 내용, 특이 사항을 점검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료 후 4단계에서는 녹음한 내용을 즉시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과 현장노트를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전사한 내용을 읽어가며, 단어, 맥락, 감정표출, 실제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공통된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의미의 유사성 및 구별성에 맞게 주제와 범주로 묶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2절 양적조사 결과

1.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설문 분석결과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표 4-10>과 같다.

〈표 4-10〉 응답자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57	51.8	
	여성	53	48.2	
연령	30대 이하	5	4.5	
	40대	38	34.5	
	50대	49	44.5	
	60대 이상	18	16.4	
학력	중졸 이하	3	2.7	
	고졸	6	5.5	
	전문대졸	5	4.5	
	대졸	48	43.6	
	대학원 재학 이상	48	43.6	
전공	사회복지 전공	62	57.4	
	타 전공	33	30.6	
	해당사항 없음	13	12.0	
소속	민간	66	65.3	
	공공	17	16.8	
	일반주민	18	17.8	
직위	민간기관	최고관리자	31	47.7
		중간관리자	24	36.9
		현장실무자	10	15.4
	공공기관	5급 이상	6	37.5
		6급	7	43.8
		7급	3	18.8
	일반주민	기타 조직원	19	86.4
소속 없음		3	13.6	
협의체 활동기간	1년 미만	27	23.3	
	1년이상~2년 미만	19	17.3	
	2년 이상~3년 미만	23	20.9	
	3년 이상	41	37.3	
지역구분	동 구	25	21.7	
	중 구	14	12.2	
	서 구	23	20.0	
	유성구	25	21.7	
	대덕구	28	24.3	



우선적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7명(51.8%), 여성 53명(48.2%)이 참여하였다.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는 5명(4.5%)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38명(34.5%), 50대는 49명(44.5%), 60대 이상은 18명(16.4%)으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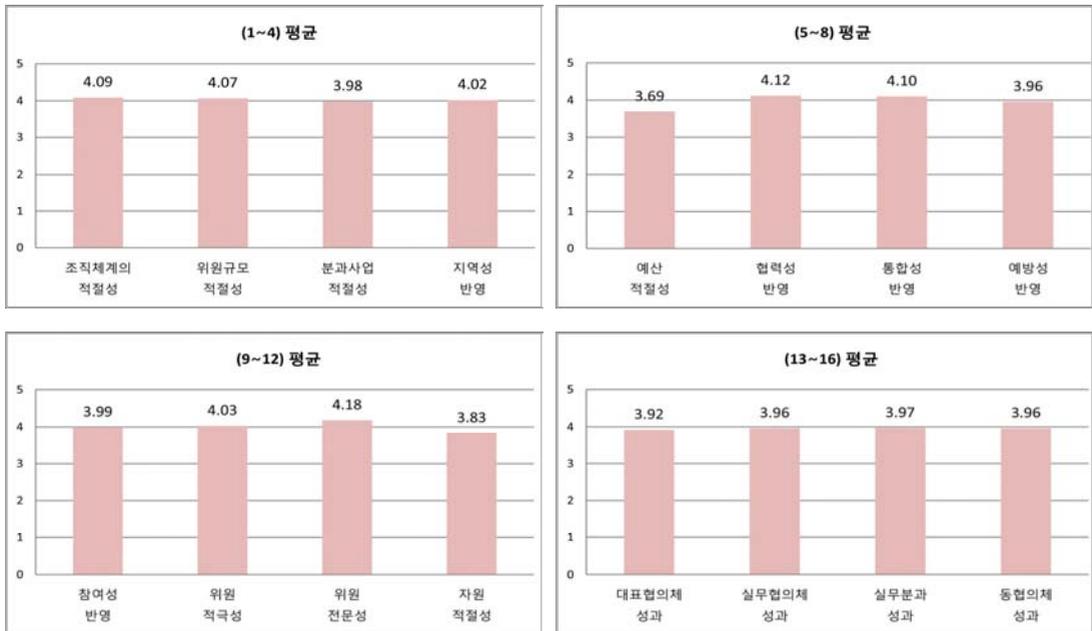
학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3명(2.7%), 고졸 6명(5.5%), 전문대졸 5명(4.5%), 대졸 48명(43.6%), 대학원 이상 48명(43.6%)으로 대졸 이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공 62명(57.4%), 타 전공 33명(30.6%), 해당사항 없음 13명(12.0%)으로 나타났다. 소속과 직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 66명(65.3%), 공공 17명(16.8%), 일반주민 18명(17.8%)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직위의 경우 최고관리자 31명(47.7%), 중간관리자 24명(36.9%), 현장실무자 10명(15.4%)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직위의 경우 5급 이상은 6명(37.5%), 6급은 7명(43.8%), 7급은 3명(18.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주민 직위의 경우에는 기타 조직회원 19명(86.4%), 소속 없음 3명(13.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체 활동기간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경우는 27명(23.3%),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는 19명(17.3%),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는 23명(20.9%), 3년 이상의 경우는 41명(37.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분을 살펴보면, 동구 25명(21.7%), 중구 14명(12.2%), 서구 23명(20.0%), 유성구 25명(21.7%), 대덕구 28명(24.3%)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조직체계의 적절성	4.09점(.741)	116명	-	4명 (3.4%)	15명 (12.9%)	64명 (55.2%)	33명 (28.4%)
2 위원규모 적절성	4.07점(.731)	116명	-	3명 (2.6%)	18명 (15.5%)	63명 (54.3%)	32명 (27.6%)
3 분과사업 적절성	3.98점(.802)	116명	-	6명 (5.2%)	20명 (17.2%)	60명 (51.7%)	30명 (25.9%)
4 지역성 반영	4.02점(.701)	116명	-	2명 (1.7%)	21명 (18.1%)	65명 (56.0%)	27명 (23.3%)
5 예산 적절성	3.69점(.936)	116명	2명 (1.7%)	11명 (9.5%)	29명 (25.0%)	53명 (45.7%)	21명 (18.1%)
6 협력성 반영	4.12점(.700)	116명	-	4명 (3.4%)	10명 (8.6%)	70명 (60.3%)	32명 (27.6%)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7 통합성 반영	4.10점(.701)	116명	-	3명 (2.6%)	14명 (12.2%)	67명 (58.3%)	31명 (27.0%)	
8 예방성 반영	3.96점(.777)	116명	-	2명 (1.7%)	31명 (27.0%)	52명 (45.2%)	30명 (26.1%)	
9 참여성 반영	3.99점(.786)	116명	1명 (0.9%)	2명 (1.7%)	24명 (20.7%)	59명 (50.9%)	30명 (25.9%)	
10 위원 적극성	4.03점(.712)	116명	-	2명 (1.7%)	21명 (18.3%)	63명 (54.8%)	29명 (25.2%)	
11 위원 전문성	4.18점(.680)	116명	-	1명 (0.9%)	15명 (12.9%)	62명 (53.4%)	38명 (32.8%)	
12 자원 적절성	3.83점(.783)	115명	-	4명 (3.5%)	34명 (29.6%)	54명 (47.0%)	23명 (20.0%)	
13 대표협의체 성과	3.92점(.774)	115명	-	6명 (5.2%)	21명 (18.3%)	64명 (55.7%)	24명 (20.9%)	
14 실무협의체 성과	3.96점(.739)	116명	-	5명 (4.3%)	19명 (16.4%)	68명 (58.6%)	24명 (20.7%)	
15 실무분과 성과	3.97점(.807)	116명	-	7명 (6.0%)	18명 (15.5%)	62명 (53.4%)	29명 (25.0%)	
16 동 협의체 성과	3.96점(.780)	115명	1명 (0.9%)	3명 (2.6%)	22명 (19.3%)	62명 (54.4%)	26명 (22.8%)	
전체 평균	3.99점	116명	-					



〈그림 4-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먼저, '구 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은 평균 4.09점(.741)으로 확인되었고, '구 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은 평균 4.07점(.73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 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8점(.802), '구 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2점(.701)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구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9점(.936), '구 협의체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12점(.700), '구 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10점(.701)으로 확인되었으며, '구 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6점(.777)의 결과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9점(.786)으로 확인되었고, '구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3점(.712), '구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18점(.680),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3점(.783)의 결과 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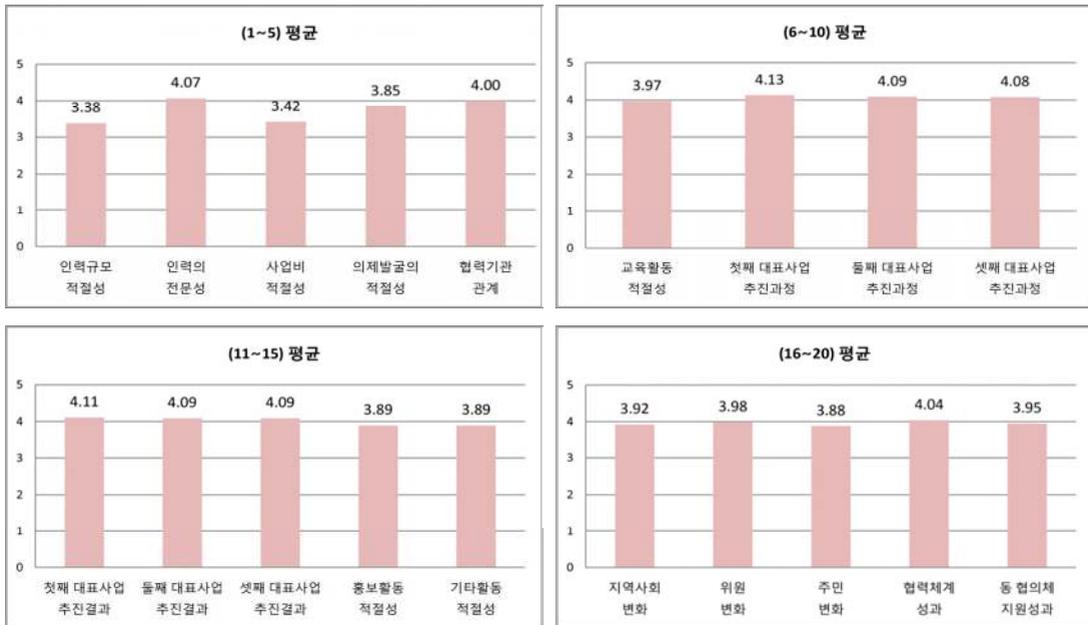
'대표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2점(.774), '실무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경우 평균은 3.96점(.739), '실무분과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7점(.807), 마지막으로 '동 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6점(.78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평균은 3.9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5점 만점 기준으로 4점에 가까운 점수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인력규모 적절성	3.38점(1.001)	116명	-	7명 (6.0%)	18명 (15.5%)	62명 (53.4%)	29명 (25.0%)
2 인력의 전문성	4.07점(.629)	116명	-	1명 (0.9%)	16명 (13.8%)	73명 (62.9%)	26명 (22.4명)
3 사업비 적절성	3.42점(.924)	113명	3명 (2.7%)	13명 (11.5%)	42명 (37.2%)	43명 (38.1%)	12명 (10.6%)
4 의제발굴의 적절성	3.85점(.737)	116명	-	5명 (4.3%)	26명 (22.4%)	66명 (56.9%)	19명 (16.4%)
5 협력기관 관계	4.00점(.737)	115명	-	2명 (1.7%)	25명 (21.7%)	59명 (51.3%)	29명 (25.2%)
6 교육활동 적절성	3.97점(.783)	115명	-	3명 (2.6%)	28명 (24.3%)	54명 (47.0%)	30명 (26.1%)
7 생략(주관식)	-	-	-	-	-	-	-
8 첫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4.13점(.772)	104명	-	5명 (4.8%)	10명 (9.6%)	56명 (53.8%)	33명 (31.7%)
9 둘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4.09점(.785)	102명	-	6명 (5.9%)	9명 (8.8%)	57명 (55.9%)	30명 (29.4%)
10 셋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4.08점(.796)	101명	-	5명 (5.0%)	13명 (12.9%)	52명 (51.5%)	31명 (30.7%)
11 첫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11점(.787)	104명	-	5명 (4.8%)	12명 (11.5%)	54명 (51.9%)	33명 (31.7%)
12 둘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09점(.826)	104명	1명 (1.0%)	4명 (3.8%)	13명 (12.5%)	53명 (51.0%)	33명 (31.7%)
13 셋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09점(.801)	101명	-	5명 (5.0%)	13명 (12.9%)	51명 (50.5%)	32명 (31.7%)
14 홍보활동 적절성	3.89점(.824)	114명	-	8명 (7.0%)	21명 (18.4%)	60명 (52.6%)	25명 (21.9%)
15 기타활동 적절성	3.89점(.817)	113명	-	8명 (7.1%)	20명 (17.7%)	61명 (54.0%)	24명 (21.2%)
16 지역사회 변화	3.92점(.792)	113명	-	6명 (5.3%)	22명 (19.5%)	60명 (53.1%)	25명 (22.1%)
17 위원 변화	3.98점(.756)	113명	-	4명 (3.5%)	21명 (18.6%)	61명 (54.0%)	27명 (23.9%)
18 주민 변화	3.88점(.776)	113명	-	5명 (4.4%)	26명 (23.0%)	59명 (52.2%)	23명 (20.4%)
19 협력체계 성과	4.04점(.719)	113명	-	3명 (2.7%)	18명 (15.9%)	64명 (56.6%)	28명 (24.8%)
20 동 협의체 지원성과	3.95점(.769)	112명	-	5명 (4.5%)	21명 (18.8%)	61명 (54.5%)	25명 (22.3%)
전체 평균	3.94점	116명			-		



〈그림 4-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우선, ‘전담인력 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38점(1.001)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7점(.629), ‘활성화사업비는 적절합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42점(.924)의 결과 값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5점(.737),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0점(.737),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7점(.783)의 결과 값을 나타냈다.

또한 ‘첫 번째 대표 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13점(.772)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대표사업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9점(.785),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8점(.796)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11점(.787)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9점(.826),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9점(.80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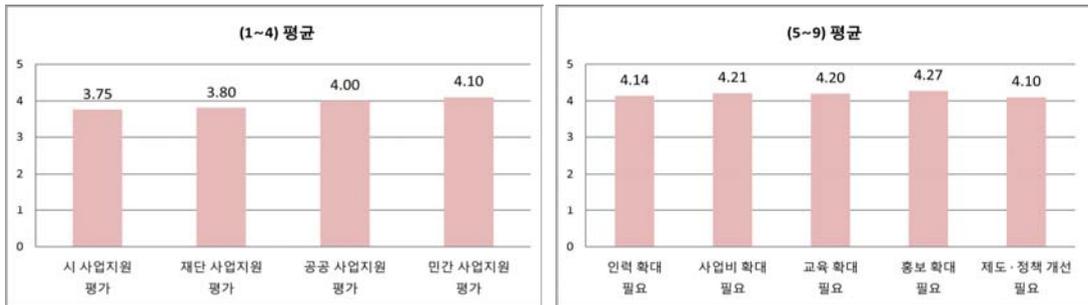
다음으로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9점(.824)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타활동(조사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은 적절

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9점(.817)의 결과 값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92점(.792)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8점(.756),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8점(.776)의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4.04점(.719), ‘동 협의체 운영지원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95점(.76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평균은 3.94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평균은 3.94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5점 만점기준으로 4점에 가까운 점수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규모와 사업비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영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시 사업지원 평가	3.75점(.815)	110명	-	7명 (6.4%)	32명 (29.1%)	52명 (47.3%)	19명 (17.3%)
2 재단 사업지원 평가	3.80점(.749)	111명	-	4명 (3.6%)	32명 (28.8%)	57명 (51.4%)	18명 (16.2%)
3 공공 사업지원 평가	4.00점(.677)	110명	-	1명 (0.9%)	22명 (20.0%)	63명 (57.3%)	24명 (21.8%)
4 민간 사업지원 평가	4.10점(.674)	111명	-	-	22명 (20.0%)	63명 (57.3%)	24명 (21.8%)
평균	3.88점	111명	-				
5 인력확대 필요	4.14점(.772)	110명	-	2명 (1.8%)	20명 (18.2%)	49명 (44.5%)	39명 (35.5%)
6 사업비 확대 필요	4.21점(.679)	110명	-	-	16명 (14.5%)	55명 (50.0%)	39명 (35.5%)
7 교육 확대 필요	4.20점(.618)	110명	-	-	12명 (10.9%)	64명 (58.2%)	34명 (30.9%)
8 홍보 확대 필요	4.27점(.618)	109명	-	-	10명 (9.2%)	60명 (55.0%)	39명 (35.8%)
9 제도·정책 개선 필요	4.10점(.719)	109명	-	1명 (0.9%)	20명 (18.3%)	55명 (50.5%)	33명 (30.3%)
10 주관식(생략)	-	-	-	-	-	-	-
평균	4.18점	110명	-				



〈그림 4-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먼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75점(.815)으로 나타났고,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0점(.74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00점(.677)으로 나타났으며,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10점(.674)값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14점(.77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21점(.679),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20점(.618),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27점(.618)의 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10점(.71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영역의 평균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 차원, 재단 차원은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공공 차원, 민간 차원은 근소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항목별 개선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고, 특히 홍보확대의 경우가 4.27점으로 가장 높은 전수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 비교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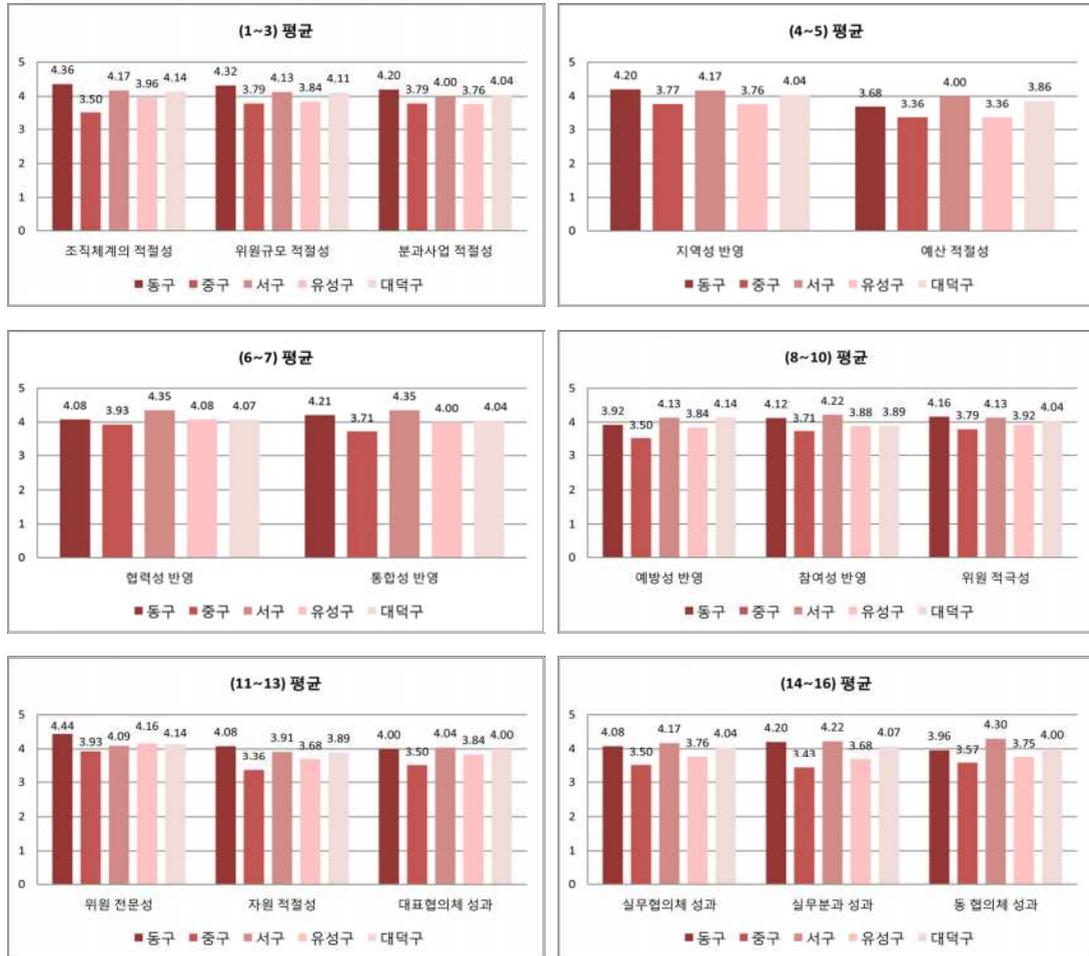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별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 <표 4-14>와 같다. 이 자료는 지역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협의체별 환경이나 지원 그리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응답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4-14〉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번호	문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	조직체계의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36점 (.490)	3.50점 (1.092)	4.17점 (.491)	3.96점 (.841)	4.14점 (.651)
2	위원규모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32점 (.476)	3.79점 (.975)	4.13점 (.626)	3.84점 (.850)	4.11점 (.685)
3	분과사업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20점 (.645)	3.79점 (.802)	4.00점 (.739)	3.76점 (.779)	4.04점 (.744)
4	지역성 반영	빈도	25명	13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20점 (.577)	3.77점 (.725)	4.17점 (.576)	3.76점 (.779)	4.04점 (.744)
5	예산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3.68점 (1.069)	3.36점 (1.082)	4.00점 (.603)	3.36점 (.995)	3.86점 (.803)
6	협력성 반영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08점 (.702)	3.93점 (.829)	4.35점 (.647)	4.08점 (.640)	4.07점 (.716)
7	통합성 반영	빈도	24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21점 (.721)	3.71점 (.825)	4.35점 (.573)	4.00점 (.645)	4.04점 (.693)
8	예방성 반영	빈도	24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3.92점 (.776)	3.50점 (.855)	4.13점 (.626)	3.84점 (.800)	4.14점 (.756)
9	참여성 반영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12점 (.781)	3.71점 (1.139)	4.22점 (.736)	3.88점 (.781)	3.89점 (.567)
10	위원 적극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16점 (.554)	3.79점 (.893)	4.13점 (.626)	3.92점 (.776)	4.04점 (.744)
11	위원 전문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44점 (.583)	3.93점 (.730)	4.09점 (.596)	4.16점 (.624)	4.14점 (.803)
12	자원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7명
		평균(표준편차)	4.08점 (.702)	3.36점 (.929)	3.91점 (.668)	3.68점 (.748)	3.89점 (.801)
13	대표협의체 성과	빈도	24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00점 (.722)	3.50점 (1.019)	4.04점 (.638)	3.84점 (.800)	4.00점 (.720)
14	실무협의체 성과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08점 (.702)	3.50점 (1.092)	4.17점 (.491)	3.76점 (.779)	4.04점 (.576)
15	실무분과 성과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20점 (.707)	3.43점 (1.016)	4.22점 (.600)	3.68점 (.852)	4.07점 (.716)



번호	문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6	동 협의회 성과	빈도	24명	14명	23명	24명	28명
		평균(표준편차)	3.96점 (.751)	3.57점 (1.089)	4.30점 (.635)	3.75점 (.737)	4.00점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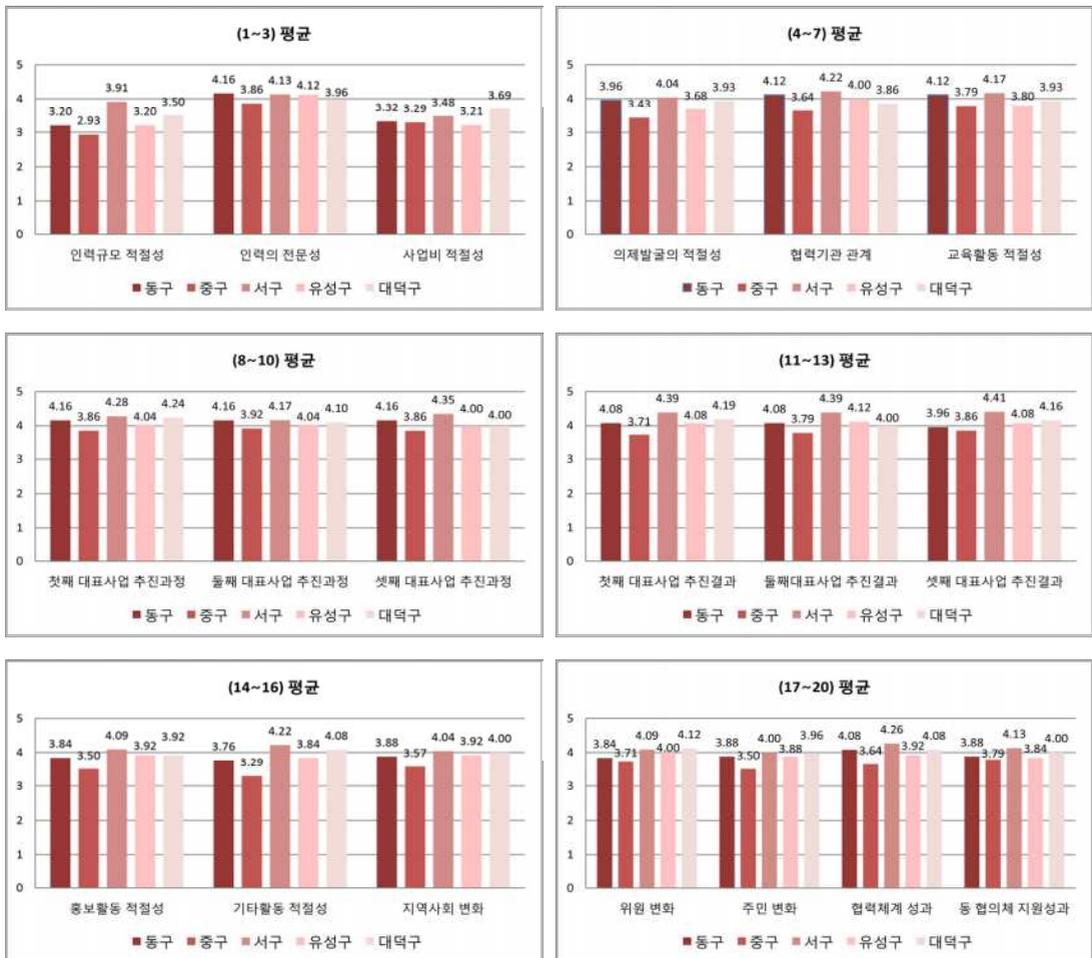
〈그림 4-4〉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표 4-15〉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번호	문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	인력규모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3.20점(1.225)	2.93점(1.072)	3.91점(.417)	3.20점(1.080)	3.50점(.882)
2	인력의 전문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16점(.624)	3.86점(.770)	4.13점(.344)	4.12점(.600)	3.96점(.744)
3	사업비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6명
		평균(표준편차)	3.32점(1.215)	3.29점(.994)	3.48점(.665)	3.21점(.884)	3.69점(.736)
4	의제발굴의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8명
		평균(표준편차)	3.96점(.790)	3.43점(1.016)	4.04점(.475)	3.68점(.748)	3.93점(.604)
5	협력기관 관계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8명
		평균(표준편차)	4.12점(.781)	3.64점(.842)	4.22점(.518)	4.00점(.834)	3.86점(.651)
6	교육활동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7명
		평균(표준편차)	4.12점(.781)	3.79점(.975)	4.17점(.576)	3.80점(.866)	3.93점(.730)
7	생략 (주관식)	빈도	-	-	-	-	-
		평균(표준편차)	-	-	-	-	-
8	첫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빈도	25명	14명	18명	25명	21명
		평균(표준편차)	4.16점(.850)	3.86점(.770)	4.28점(.575)	4.04점(.889)	4.24점(.700)
9	둘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빈도	25명	13명	18명	25명	20명
		평균(표준편차)	4.16점(.850)	3.92점(.862)	4.17점(.618)	4.04점(.841)	4.10점(.788)
10	셋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빈도	25명	14명	17명	25명	19명
		평균(표준편차)	4.16점(.800)	3.86점(.864)	4.35점(.702)	4.00점(.816)	4.00점(.816)
11	첫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빈도	25명	14명	18명	25명	21명
		평균(표준편차)	4.08점(.812)	3.71점(.825)	4.39점(.698)	4.08점(.909)	4.19점(.602)
12	둘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빈도	25명	14명	18명	25명	21명
		평균(표준편차)	4.08점(.702)	3.79점(.893)	4.39점(.698)	4.12점(.881)	4.00점(.949)
13	셋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빈도	25명	14명	17명	25명	19명
		평균(표준편차)	3.96점(.889)	3.86점(.864)	4.41점(.712)	4.08점(.862)	4.16점(.602)
14	홍보활동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6명
		평균(표준편차)	3.84점(.898)	3.50점(1.019)	4.09점(.668)	3.92점(.812)	3.92점(.744)
15	기타활동 적절성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3.76점(.879)	3.29점(1.069)	4.22점(.671)	3.84점(.800)	4.08점(.493)
16	지역사회 변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3.88점(.781)	3.57점(.938)	4.04점(.706)	3.92점(.862)	4.00점(.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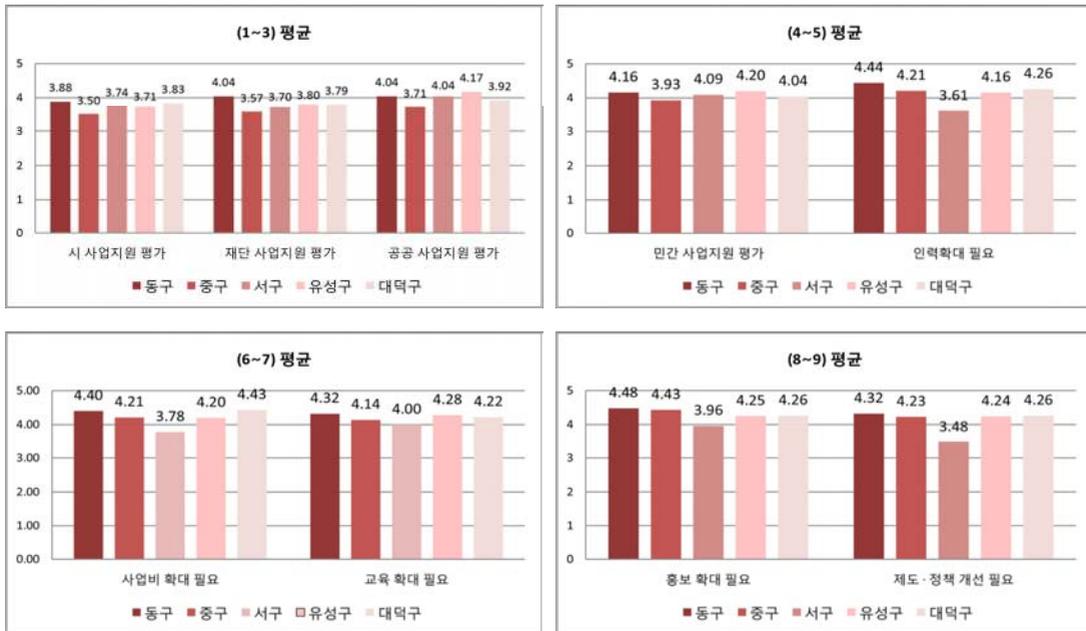
번호	문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7	위원 변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3.84점(.746)	3.71점(.994)	4.09점(.596)	4.00점(.866)	4.12점(.600)
18	주민 변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3.88점(.781)	3.50점(.941)	4.00점(.674)	3.88점(.833)	3.96점(.676)
19	협력체계 성과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4.08점(.702)	3.64점(.842)	4.26점(.619)	3.92점(.812)	4.08점(.572)
20	동 협의회 지원성과	빈도	24명	14명	23명	25명	25명
		평균(표준편차)	3.88점(.850)	3.79점(.975)	4.13점(.757)	3.84점(.688)	4.00점(.645)



〈그림 4-5〉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표 4-16〉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문항		구분	등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	시 사업지원 평가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4명
		평균 (표준편차)	3.88점 (.781)	3.50점 (1.019)	3.74점 (.619)	3.71점 (.806)	3.83점 (.917)
2	재단 사업지원 평가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4명
		평균 (표준편차)	4.04점 (.889)	3.57점 (.852)	3.70점 (.559)	3.80점 (.707)	3.79점 (.721)
3	공공 사업지원 평가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4명
		평균 (표준편차)	4.04점 (.676)	3.71점 (.825)	4.04점 (.638)	4.17점 (.637)	3.92점 (.654)
4	민간 사업지원 평가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4명
		평균 (표준편차)	4.16점 (.624)	3.93점 (.616)	4.09점 (.733)	4.20점 (.707)	4.04점 (.690)
5	인력확대 필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3명
		평균 (표준편차)	4.44점 (.583)	4.21점 (.893)	3.61점 (.722)	4.16점 (.688)	4.26점 (.810)
6	사업비 확대 필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3명
		평균 (표준편차)	4.40점 (.577)	4.21점 (.426)	3.78점 (.736)	4.20점 (.707)	4.43점 (.662)
7	교육 확대 필요	빈도	25명	14명	23명	25명	23명
		평균 (표준편차)	4.32점 (.627)	4.14점 (.663)	4.00점 (.603)	4.28점 (.614)	4.22점 (.600)
8	홍보 확대 필요	빈도	25명	14명	23명	24명	23명
		평균 (표준편차)	4.48점 (.510)	4.43점 (.514)	3.96점 (.638)	4.25점 (.676)	4.26점 (.619)
9	제도·정책 개선 필요	빈도	25명	13명	23명	25명	23명
		평균 (표준편차)	4.32점 (.557)	4.23점 (.599)	3.48점 (.593)	4.24점 (.723)	4.26점 (.752)
10	(생략) 주관식	빈도	-	-	-	-	-
		평균 (표준편차)	-	-	-	-	-



〈그림 4-6〉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2.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행인력 설문 분석결과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의 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응답자 특성

구분		N	%
소속	전담인력	5	38.5
	공무원	8	61.5
성별	남성	4	30.8
	여성	9	69.2
연령	30대 이하	3	25.0
	40대	5	41.7
	50대	4	33.3
학력	대졸	9	69.2
	대학원 재학 이상	4	30.8
전공	사회복지 전공	7	53.8
	타 전공	6	46.2
협의체 활동기간	1년 미만	6	46.2
	1년이상~2년 미만	6	46.2
	2년 이상~3년 미만	1	7.7
지역구분	동 구	3	23.1
	중 구	3	23.1
	서 구	2	15.4
	유성구	3	23.1
	대덕구	2	15.4
공모사업 참여시기	2018년부터	8	66.7
	2019년부터	4	33.3
공무원만 해당			
직급	6급	4	50.0
	7급	3	37.5
	8급 이하	1	12.5
직렬	사회복지직	6	75.0
	기타 직렬	2	25.0

먼저, 소속을 살펴보면, 전담인력은 5명(38.5%), 공무원은 8명(61.5%)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성이 4명(30.8%) 여성이 9명(69.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3명(25.0%), 40대는 5명(41.7%), 50대는 4명(33.3%)의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력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은 9명(69.2%), 대학원 재학 이상은 4명(30.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전공 해당자는 7명(53.8%), 타 전공자는 6명(46.2%)으로 나타났고, 협의체 활동기간의 경우, 1년 미만 해당자는 6명(46.2%), 1년 이상 ~ 2년 미만 해당자는 6명(46.2%), 2년 이상 ~ 3년 미만의 해당자는 1명(7.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 3명(23.1%), 중구 3명(23.1%), 서구 2명(15.4%), 유성구 3명(23.1%), 대덕구 2명(15.4%)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 참여시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참여한 인원은 8명(66.7%), 2019년부터 참여한 인원은 4명(33.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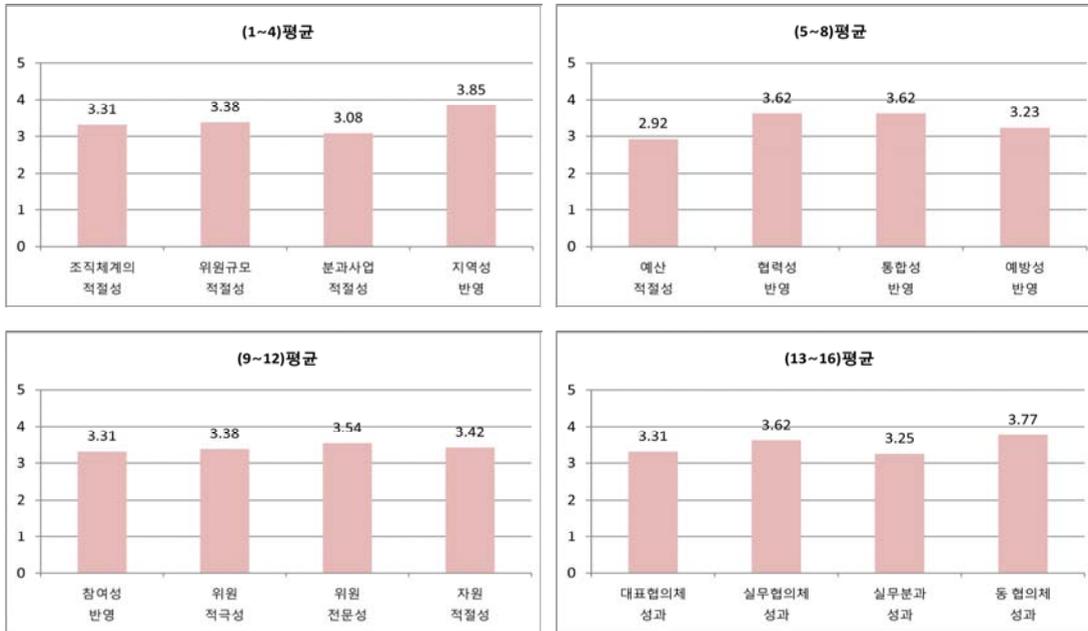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인 직급의 경우, 6급은 4명(50.0%), 7급은 3명(37.5%), 8급 이하는 1명(12.5%)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직렬의 경우 사회복지직은 6명(75.0%), 기타 직렬은 2명(25.0%)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8〉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조직체계의 적절성	3.31점(.947)	13명	-	3명 (23.1%)	4명 (30.8%)	5명 (38.5%)	1명 (7.7%)
2 위원규모 적절성	3.38점(.870)	13명	-	2명 (15.4%)	5명 (38.5%)	5명 (38.5%)	1명 (7.7%)
3 분과사업 적절성	3.08점(1.311)	12명	2명 (16.7%)	2명 (16.7%)	2명 (16.7%)	2명 (16.7%)	5명 (41.7%)
4 지역성 반영	3.85점(.689)	13명	-	-	4명 (30.8%)	7명 (53.8%)	2명 (15.4%)
5 예산 적절성	2.92점(1.115)	13명	1명 (7.7%)	4명 (30.8%)	4명 (30.8%)	3명 (23.1%)	1명 (7.7%)
6 협력성 반영	3.62점(.870)	13명	-	1명 (7.7%)	5명 (38.5%)	5명 (38.5%)	2명 (15.4%)
7 통합성 반영	3.62점(.870)	13명	-	1명 (7.7%)	5명 (38.5%)	5명 (38.5%)	2명 (15.4%)
8 예방성 반영	3.23점(.725)	13명	-	2명 (15.4%)	6명 (46.2%)	5명 (38.5%)	-
9 참여성 반영	3.31점(.630)	13명	-	1명 (7.7%)	7명 (53.8%)	5명 (38.5%)	-
10 위원 적극성	3.38점(.870)	13명	-	2명 (15.4%)	5명 (38.5%)	5명 (38.5%)	1명 (7.7%)
11 위원 전문성	3.54점(1.050)	13명	-	2명 (15.4%)	5명 (38.5%)	3명 (23.1%)	3명 (23.1%)
12 자원 적절성	3.42점(.793)	12명	-	1명 (8.3%)	6명 (50.0%)	4명 (33.3%)	1명 (8.3%)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3	대표협의체 성과	3.31점(.947)	13명	-	2명 (15.4%)	7명 (53.8%)	2명 (15.4%)	2명 (15.4%)
14	실무협의체 성과	3.62점(.768)	13명	-	-	7명 (53.8%)	4명 (30.8%)	2명 (15.4%)
15	실무분과 성과	3.25점(.965)	12명	1명 (8.3%)	-	7명 (58.3%)	3명 (25.0%)	1명 (8.3%)
16	동 협의체 성과	3.77점(.599)	13명	-	-	4명 (30.8%)	8명 (61.5%)	1명 (7.7%)
전체 평균		3.41점	11명	-				



〈그림 4-7〉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우선, '구 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31점(.947)으로 나타났고, '구 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38점(.870)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구 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08점(1.311)로 나타났으며, '구 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5점(.689), '구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2.92점(1.115)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구 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2점(.870)으로 나타났으며, '구 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또한 3.62점(.87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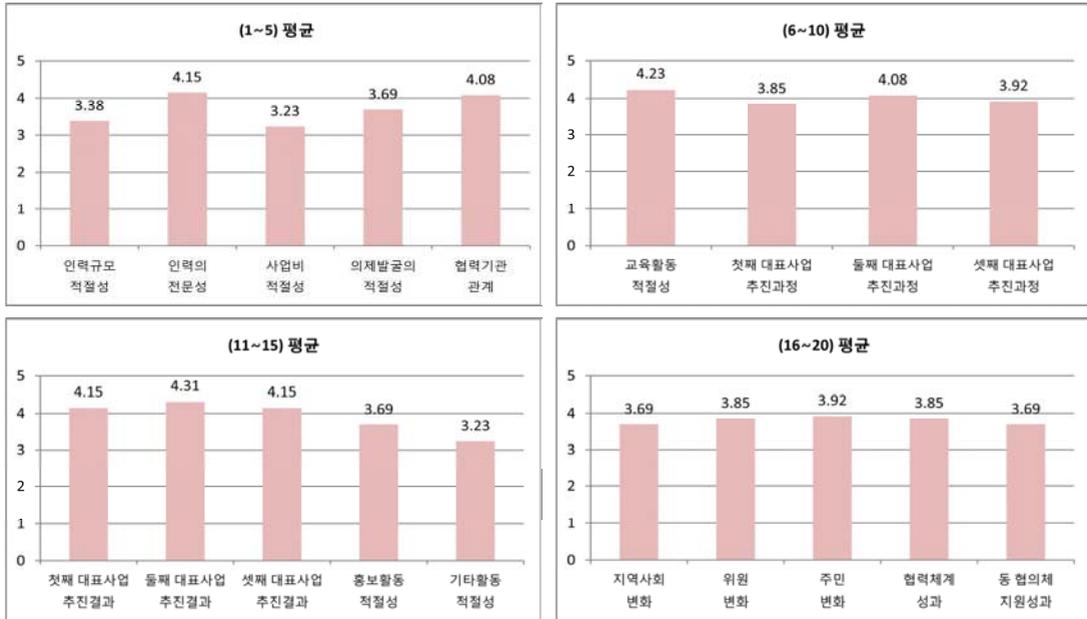
또한 '구 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23점(.725), '구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31점(.630), '구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38점(.87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구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54점(1.050),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42점(.793)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31점(.947), '실무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2점(.768), '실무분과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25점(.965), '동 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77점(.599)의 결과 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들은 협의체 위원들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분과사업 적절성은 3.08점, 예산 적절성은 2.92점으로 개선이 가장 필요한 항목임을 보여준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9〉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유효 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인력규모 적절성	3.38점 (1.044)	13명	-	3명 (23.1%)	4명 (30.8%)	4명 (30.8%)	2명 (15.4%)	
2 인력의 전문성	4.15점 (.801)	13명	-	-	3명 (23.1%)	5명 (38.5%)	5명 (38.5%)	
3 사업비 적절성	3.23점 (.832)	13명	-	2명 (15.4%)	7명 (53.8%)	3명 (23.1%)	1명 (7.7%)	
4 의제발굴의 적절성	3.69점 (.630)	13명	-	-	5명 (38.5%)	7명 (53.8%)	1명 (7.7%)	
5 협력기관 관계	4.08점 (.494)	13명	-	-	1명 (7.7%)	10명 (76.9%)	2명 (15.4%)	
6 교육활동 적절성	4.23점 (.599)	13명	-	-	1명 (7.7%)	8명 (61.5%)	4명 (30.8%)	
7 생략(주관식)	-	-	-	-	-	-	-	
8 첫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85점 (.689)	13명	-	-	4명 (30.8%)	7명 (53.8%)	2명 (15.4%)	
9 둘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4.08점 (.862)	13명	-	-	4명 (30.8%)	4명 (30.8%)	5명 (38.5%)	
10 셋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92점 (.760)	13명	-	-	4명 (30.8%)	6명 (46.2%)	3명 (23.1%)	
11 첫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15점 (.689)	13명	-	-	2명 (15.4%)	7명 (53.8%)	4명 (30.8%)	
12 둘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31점 (.751)	13명	-	-	2명 (15.4%)	5명 (38.5%)	6명 (46.2%)	
13 셋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4.15점 (.689)	13명	-	-	2명 (15.4%)	7명 (53.8%)	4명 (30.8%)	
14 홍보활동 적절성	3.69점 (.630)	13명	-	-	5명 (38.5%)	7명 (53.8%)	1명 (7.7%)	
15 기타활동 적절성	3.23점 (.832)	13명	-	2명 (15.4%)	7명 (53.8%)	3명 (23.1%)	1명 (7.7%)	
16 지역사회 변화	3.69점 (.630)	13명	-	-	5명 (38.5%)	7명 (53.8%)	1명 (7.7%)	
17 위원 변화	3.85점 (.801)	13명	-	1명 (7.7%)	2명 (15.4%)	8명 (61.5%)	2명 (15.4%)	
18 주민 변화	3.92점 (.494)	13명	-	-	2명 (15.4%)	10명 (76.9%)	1명 (7.7%)	
19 협력체계 성과	3.85점 (.689)	13명	-	-	4명 (30.8%)	7명 (53.8%)	2명 (15.4%)	
20 등 협의체 지원성과	3.69점 (.630)	13명	-	-	5명 (38.5%)	7명 (53.8%)	1명 (7.7%)	
전체 평균	3.85점	13명	-					



〈그림 4-8〉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우선 ‘전담인력 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38점(1.044)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15점(.801), ‘활성화 사업비는 적절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23점(.83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9점(.630)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08점(.494),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23점(.599)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85점(.68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08점(.862),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92점(.76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15점(.68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31점(.751),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15점(.68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표사업의 추진과정보다 추진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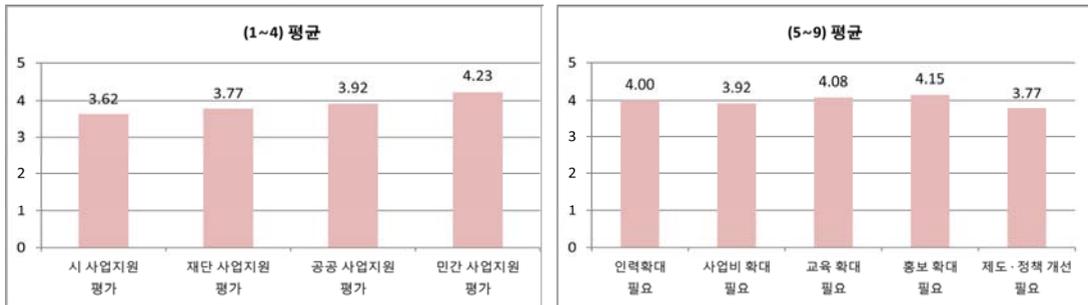
3.69점(.630)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활동(조사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23점(.832)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9점(.630),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85점(.801),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92점(.494)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5점(.689), ‘동 협의체 운영지원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9점(.63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 평균은 3.85점으로 나타났고, 이 영역에서도 앞의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인력규모의 적절성과 사업비의 적절성 항목의 값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 개선이 가장 필요함을 나타냈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0〉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시 사업지원 평가	3.62점 (.506)	13명	-	-	5명 (38.5%)	8명 (61.5%)	-
2 재단 사업지원 평가	3.77점 (.599)	13명	-	-	4명 (30.8%)	8명 (61.5%)	-
3 공공 사업지원 평가	3.92점 (.641)	13명	-	-	3명 (23.1%)	8명 (61.5%)	2명 (15.4%)
4 민간 사업지원 평가	4.23점 (.599)	13명	-	-	1명 (7.7%)	8명 (61.5%)	4명 (80.8%)
평균	3.88	13명	-				
5 인력확대 필요	4.00점 (.577)	13명	-	-	2명 (15.4%)	9명 (69.2%)	2명 (15.4%)
6 사업비 확대 필요	3.92점 (.900)	12명	-	1명 (8.3%)	2명 (16.7%)	6명 (50.0%)	3명 (25.0%)
7 교육 확대 필요	4.08점 (.760)	13명	-	-	3명 (23.1%)	6명 (46.2%)	4명 (30.8%)
8 홍보 확대 필요	4.15점 (.689)	13명	-	-	2명 (15.4%)	7명 (53.8%)	4명 (30.8%)
9 제도·정책 개선 필요	3.77점 (.725)	13명	-	-	5명 (38.5%)	6명 (46.2%)	2명 (15.4%)
10 생략(주관식)	-	-	-	-	-	-	-
평균	3.98점	13명	-				



〈그림 4-9〉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먼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62점 (.506)으로 나타났으며,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77점(.599),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2점(.614),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23점(.599)으로 민간 사업지원 평가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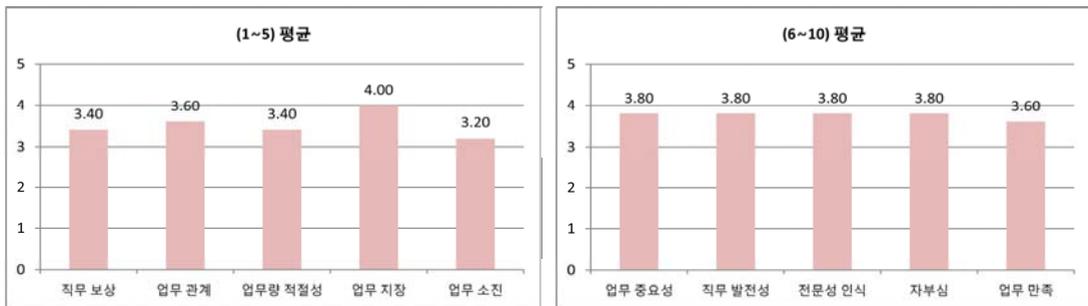
또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00점(.57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2점(.900),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08점(.760),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15점(.68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77점(.725)의 결과 값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 영역 분석결과, 평균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 시 시<재단<공공<민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시와 재단의 역할강화가 요구된다.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의 직무만족도’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인력 직무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직무 보상	3.40점(.548)	5명	-	-	3명 (60.0%)	2명 (40.0%)	-	
2 업무 관계	3.60점(1.140)	5명	-	1명 (20.0%)	1명 (20.0%)	2명 (40.0%)	1명 (20.0%)	
3 업무량 적절성	3.40점(.548)	5명	-	-	3명 (60.0%)	2명 (40.0%)	-	
4 업무 지장	4.00점(.707)	5명	-	-	1명 (20.0%)	3명 (60.0%)	1명 (20.0%)	
5 업무 소진	3.20점(.837)	5명	-	-	1명 (20.0%)	2명 (40.0%)	2명 (40.0%)	
6 업무 중요성	3.80점(.447)	5명	-	-	1명 (20.0%)	4명 (80.0%)	-	
7 직무 발전성	3.80점(1.095)	5명	-	1명 (20.0%)	-	3명 (60.0%)	1명 (20.0%)	
8 전문성 인식	3.80점(1.095)	5명	-	1명 (20.0%)	-	3명 (60.0%)	1명 (20.0%)	
9 자부심	3.80점(.837)	5명	-	-	2명 (40.0%)	2명 (40.0%)	1명 (20.0%)	
10 업무 만족	3.60점(.548)	5명	-	-	2명 (40.0%)	3명 (60.0%)	-	
전체 평균	3.64점	5명	-					



〈그림 4-10〉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인력 직무만족도

본 문항들은 전담인력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으로, ‘나에게 부여된 업무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40점(.548) ‘업무가 바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0점(1.140), ‘내가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량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40점(.54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정적, 사무적인 일이 많아서 내가 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00점(.707), ‘나의 업무는 소진율이 높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20점(.837),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447), ‘나의 직무는 발전성이 많은 편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1.095)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내가 하는 일은 전문적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0점(1.095),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837),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60점(.548)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의 직무만족도는 전체평균이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담인력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에서 긍정 사이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위원 설문 분석결과

□ 동 협의체 위원들의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2〉 응답자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386	39.5
	여성	591	60.5
연령	30대 이하	101	10.1
	40대	93	19.4
	50대	461	46.3
	60대	241	24.2
학력	중졸	38	4.0
	고졸	321	34.0
	전문대졸	125	13.3
	대졸	381	40.4
	대학원 재학 이상	78	8.3
협의체 활동기간	1년 미만	254	26.3
	1년이상~2년 미만	379	39.2
	2년 이상~3년 미만	200	20.7
	3년 이상	134	13.9
참여동기	본인 자발적 참여	301	30.8
	동장의 추천을 통해	217	22.2

구분		N	%
	봉사단체 추천	179	18.3
	통장 모임 추천	104	10.7
	지역주민 추천	175	17.9
위원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178	18.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3	5.4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0	5.1
	통 장	168	17.2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304	31.2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	222	22.8
지역구분	동 구	224	22.2
	중 구	255	25.3
	서 구	239	23.7
	유성구	131	13.0
	대덕구	159	15.8
참여시기	2018년부터	517	54.7
	2019년부터	218	23.1
	해당사항 없음	210	22.2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386명(39.5%), 여성 591(60.5%)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101명(10.1%), 40대는 193명(19.4%), 50대는 461명(46.3%), 60대 이상은 241명(24.2%)으로 나타났고, 학력의 경우는 중졸 이하가 38명(4.0%), 고졸이 321명(34.0%), 전문대졸 125명(13.3%), 대졸은 381명(40.4%), 대학원 재학 이상은 78명(8.3%)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254명(26.3%), 1년 이상 ~ 2년 미만은 379명(39.2%), 2년 이상 ~ 3년 미만은 200명(20.7%), 3년 이상은 134명(13.9%)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본인의 자발적 참여는 301명(30.8%)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는 217명(22.2%), 봉사단체 추천은 179명(18.3%), 통장 모임 추천은 104명(10.7%), 지역주민 추천은 175명(17.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원자격을 살펴보면,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는 178명(18.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3명(5.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50명(5.1%), 통장은 168명(17.2%), 주민자치위원 혹은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은 304명(31.2%),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은 222명(22.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224명(22.2%), 중구는 255명(25.3%), 서구의 경우 239명(23.7%), 유성구는 131명(13.0%), 대덕구는 159명(15.8%)로 나타났으며, 참여시기의 경우 2018년부터 활동한 인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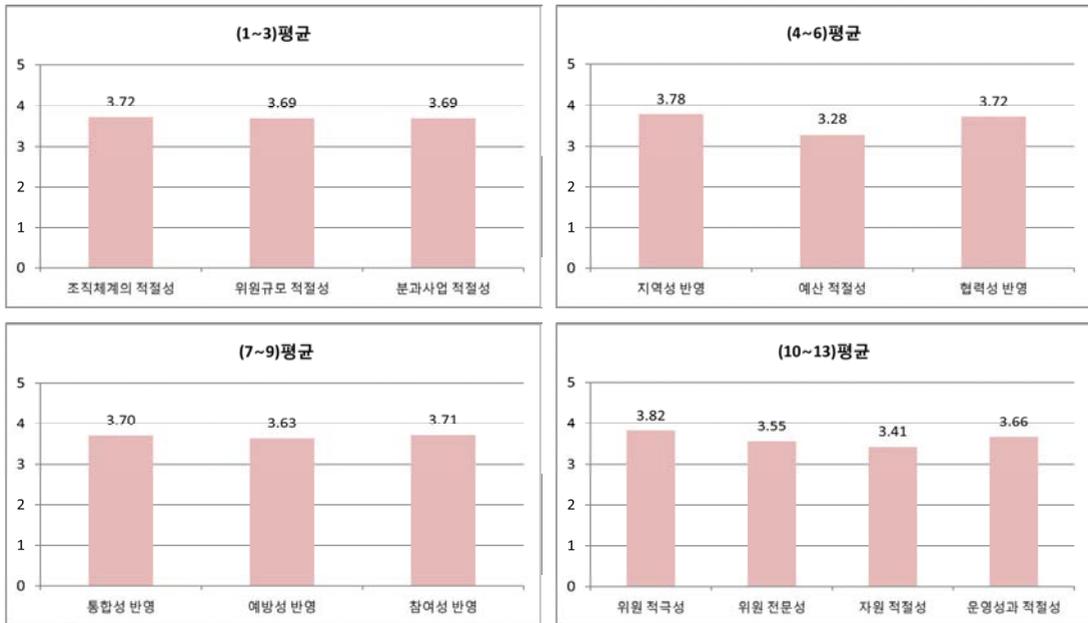


517명(54.7%), 2019년부터 활동한 인원은 218명(23.1%), 해당사항 없음은 210명(22.2%)으로 나타났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조직체계의 적절성	3.72점 (.828)	1,020명	6명 (0.6%)	59명 (5.8%)	316명 (31.0%)	469명 (46.0%)	170명 (16.7%)	
2 위원규모 적절성	3.69점 (.828)	1,020명	6명 (0.6%)	60명 (5.9%)	339명 (33.2%)	452명 (44.3%)	163명 (16.0%)	
3 분과사업 적절성	3.69점 (.862)	991명	8명 (0.8%)	67명 (6.8%)	318명 (32.1%)	427명 (43.1%)	171명 (17.3%)	
4 지역성 반영	3.78점 (.838)	1,017명	5명 (0.5%)	51명 (5.0%)	312명 (60.7%)	446명 (43.9%)	203명 (20.0%)	
5 예산 적절성	3.28점 (1.015)	1,017명	43명 (4.2%)	176명 (17.3%)	372명 (36.6%)	309명 (30.4%)	117명 (11.5%)	
6 협력성 반영	3.72점 (.899)	1,016명	15명 (1.5%)	65명 (6.4%)	311명 (30.6%)	428명 (42.1%)	197명 (19.4%)	
7 통합성 반영	3.70점 (.862)	1,012명	5명 (0.5%)	68명 (6.7%)	339명 (33.5%)	414명 (40.9%)	186명 (18.4%)	
8 예방성 반영	3.63점 (.896)	1,018명	9명 (0.9%)	88명 (8.6%)	344명 (33.8%)	402명 (39.5%)	175명 (17.2%)	
9 참여성 반영	3.71점 (.906)	1,017명	10명 (1.0%)	84명 (8.3%)	291명 (28.6%)	433명 (42.6%)	199명 (19.6%)	
10 위원 적극성	3.82점 (.886)	1,015명	8명 (0.8%)	57명 (5.6%)	288명 (28.4%)	420명 (41.4%)	242명 (23.8%)	
11 위원 전문성	3.55점 (.886)	1,017명	9명 (0.9%)	89명 (8.8%)	408명 (40.1%)	354명 (34.8%)	157명 (15.4%)	
12 자원 적절성	3.41점 (.911)	1,019명	14명 (1.4%)	133명 (13.1%)	415명 (40.7%)	333명 (32.7%)	124명 (12.2%)	
13 운영성과 적절성	3.66점 (.851)	1,020명	7명 (0.7%)	65명 (6.4%)	368명 (36.1%)	412명 (40.4%)	168명 (16.5%)	
전체 평균	3.64점	1,020명	-					



〈그림 4-1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먼저 ‘동 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72점(.828)으로 나타났고, ‘동 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질문은 3.69점(.828)으로 나타났으며, ‘동 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9점(.862)으로 나타났다. ‘동 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78점(.838), ‘동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28점(1.015)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동 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72점(.899), ‘동 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70점(.862), ‘동 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3점(.896)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3.71점(.906)으로 나타났다. ‘동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82점(.886), ‘동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55점(.88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41점(.911)으로 나타났다. ‘동 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



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6점(.851)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전체 평균은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에서 예산 적절성(3.28점), 자원 적절성(3.41점)과 위원 전문성(3.55점)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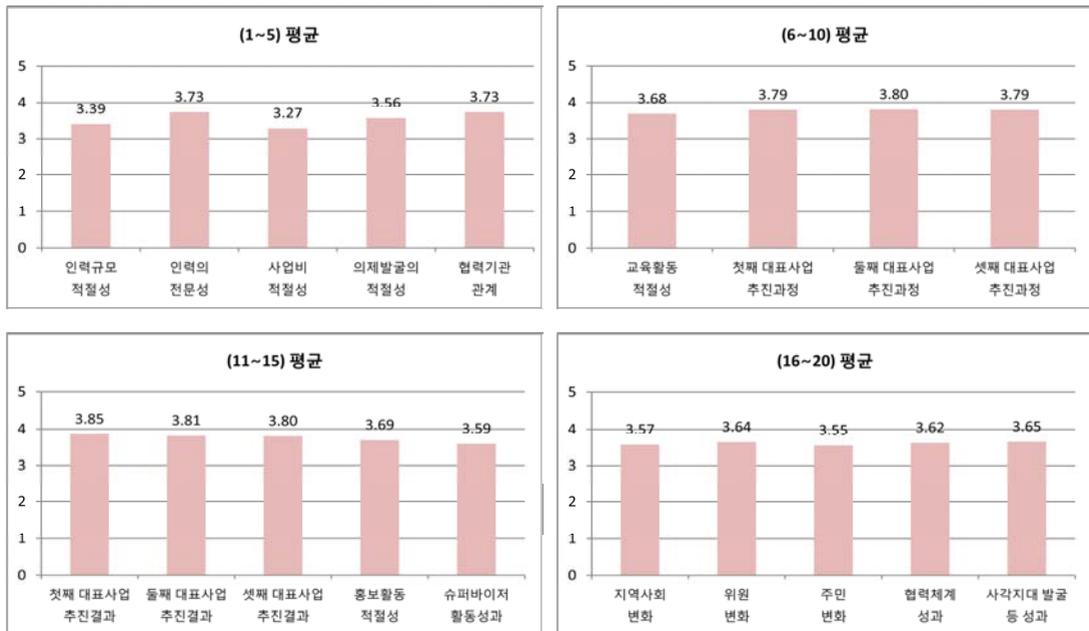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인력규모 적절성	3.39점(.906)	794명	17명 (2.1%)	100명 (12.6%)	313명 (30.7%)	284명 (35.8%)	80명 (10.1%)
2 인력의 전문성	3.73점(.835)	796명	3명 (0.4%)	48명 (6.0%)	251명 (31.5%)	352명 (44.2%)	142명 (17.9%)
3 사업비 적절성	3.27점(.924)	967명	27명 (2.8%)	144명 (14.9%)	425명 (44.0%)	280명 (29.0%)	91명 (9.4%)
4 의제발굴의 적절성	3.56점(.815)	998명	5명 (0.5%)	69명 (6.9%)	412명 (41.3%)	388명 (38.0%)	124명 (12.1%)
5 협력기관 관계	3.73점(.803)	996명	6명 (0.6%)	35명 (3.4%)	347명 (34.0%)	437명 (42.8%)	171명 (16.7%)
6 교육활동 적절성	3.68점(.808)	986명	6명 (0.6%)	47명 (4.8%)	354명 (35.9%)	430명 (43.6%)	171명 (17.2%)
7 주관식	-	-	-	-	-	-	-
8 첫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79점(.811)	991명	8명 (0.9%)	33명 (3.6%)	266명 (29.2%)	436명 (47.9%)	168명 (18.4%)
9 둘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80점(.795)	849명	5명 (0.6%)	31명 (3.7%)	250명 (29.4%)	410명 (48.3%)	153명 (18.0%)
10 셋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79점(.798)	791명	3명 (0.4%)	32명 (4.0%)	237명 (30.0%)	374명 (47.3%)	145명 (18.3%)
11 첫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85점(.836)	902명	4명 (0.4%)	46명 (5.1%)	232명 (25.7%)	421명 (46.7%)	199명 (22.1%)
12 둘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81점(.842)	843명	5명 (0.6%)	42명 (5.0%)	240명 (28.5%)	380명 (45.1%)	176명 (20.9%)
13 셋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80점(.824)	784명	3명 (0.4%)	38명 (4.8%)	229명 (29.2%)	358명 (45.7%)	156명 (19.9%)
14 홍보활동 적절성	3.69점(.815)	992명	3명 (0.3%)	58명 (5.8%)	339명 (34.2%)	436명 (44.0%)	156명 (15.7%)
15 슈퍼바이저 활동성과	3.59점(.811)	989명	4명 (0.4%)	66명 (6.7%)	390명 (39.4%)	402명 (40.6%)	127명 (12.8%)
16 지역사회 변화	3.57점(.842)	996명	4명 (0.4%)	91명 (9.1%)	363명 (36.4%)	410명 (41.2%)	128명 (12.9%)
17 위원 변화	3.64점(.834)	994명	6명 (0.6%)	71명 (7.1%)	342명 (34.4%)	434명 (43.7%)	141명 (14.2%)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8 주민 변화	3.55점(.856)	994명	5명 (0.5%)	91명 (9.2%)	384명 (38.6%)	379명 (38.1%)	135명 (13.6%)
19 협력체계 성과	3.62점(.822)	996명	5명 (0.5%)	71명 (7.1%)	354명 (35.5%)	433명 (43.5%)	133명 (13.4%)
20 사각지대 발굴 등 성과	3.65점(.869)	998명	4명 (0.4%)	84명 (8.4%)	333명 (33.4%)	409명 (41.0%)	168명 (16.8%)
전체 평균	3.66점	1,006명	-				

※ 질문 1번과 2번의 경우,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10개 동은 답변하지 않았음



〈그림 4-1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먼저, ‘전담인력 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은 3.39점(.906)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은 3.73점(.835), ‘활성화사업비는 적절합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27점(.92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은 3.56점(.815),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은 3.73점(.803),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8점(.80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79점(.811),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795),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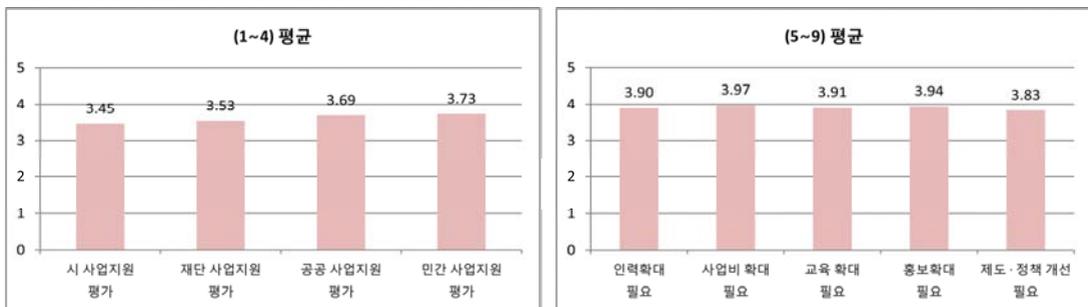
라는 문항의 평균은 3.79점(.798)의 결과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5점(.836)의 값이 나타났고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1점(.842),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824)의 값 나타냈다.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9점(.815)으로 나타났으며, ‘민관협력 슈퍼바이저의 활동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59점(.811),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57점(.842)으로 나타냈다. 이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4점(.834)이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55점(.856)의 값이 확인되었다. 또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2점(.822),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65점(.869)의 값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 전체 평균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동 협의체 위원들은 인력의 전문성, 협력기관 관계, 대표사업의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인력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적절성, 지역사회 변화, 주민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향후 동 협의체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사업인력에 대한 인식 및 홍보가 확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시 사업지원 평가	3.45점 (.823)	1,003명	22명 (2.2%)	59명 (5.9%)	460명 (45.9%)	372명 (37.1%)	90명 (9.0%)	
2 재단 사업 지원 평가	3.53점 (.834)	1,004명	23명 (2.3%)	49명 (4.9%)	409명 (40.7%)	417명 (41.5%)	106명 (10.6%)	
3 공공 사업지원 평가	3.69점 (.764)	1,002명	4명 (0.4%)	32명 (3.2%)	372명 (37.1%)	452명 (45.1%)	142명 (14.2%)	
4 민간 사업지원 평가	3.73점 (.758)	1,001명	5명 (0.5%)	30명 (3.0%)	340명 (34.0%)	483명 (48.3%)	143명 (14.3%)	
평균	3.60점	1,003명	-					
5 인력확대 필요	3.90점 (.755)	1,003명	1명 (0.1%)	23명 (2.3%)	263명 (26.2%)	500명 (49.9%)	216명 (21.5%)	
6 사업비 확대 필요	3.97점 (.814)	1,006명	2명 (0.2%)	31명 (3.1%)	241명 (24.0%)	449명 (44.6%)	283명 (27.7%)	
7 교육 확대 필요	3.91점 (.774)	1,005명	2명 (0.2%)	32명 (3.2%)	244명 (24.3%)	507명 (50.4%)	220명 (21.9%)	
8 홍보 확대 필요	3.94점 (.777)	1,000명	1명 (0.1%)	30명 (3.0%)	311명 (31.1%)	451명 (45.1%)	207명 (20.7%)	
9 제도·정책 개선 필요	3.83점 (.792)	1,001명	2명 (0.2%)	30명 (3.0%)	311명 (31.1%)	451명 (45.1%)	207명 (20.7%)	
10 주관식	-	-	-	-	-	-	-	
평균	3.91점	1,004명	-					



〈그림 4-1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우선,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45점(.823)으로 나타났으며,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53점(.83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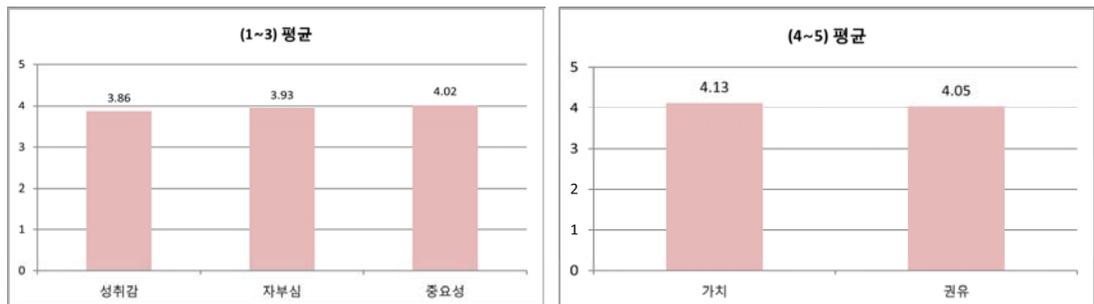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69점(.764)으로 나타났으며,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73점(.75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0점(.75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7점(.81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1점(.774)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4점(.77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3점(.79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 영역의 결과 평균은 3.60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개선 영역의 결과 평균은 3.91점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을 통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만족도’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만족도

항목	평균	유효 수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성취감	3.86점(.763)	994	1(0.1%)	17(1.7%)	311(31.3%)	456(45.9%)	209(21.0%)	
2 자부심	3.93점(.765)	994	3(0.3%)	10(1.0%)	279(28.1%)	462(46.5%)	240(24.1%)	
3 중요성	4.02점(.758)	992	1(0.1%)	16(1.6%)	223(22.5%)	478(46.8%)	274(27.6%)	
4 가치	4.13점(.736)	993	2(0.2%)	6(0.6%)	182(18.3%)	473(47.6%)	330(33.2%)	
5 권유	4.05점(.769)	994	1(0.1%)	13(1.3%)	224(22.5%)	451(45.4%)	305(30.7%)	
전체 평균	4.00점	994	-					



〈그림 4-1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만족도

먼저,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6점(.763)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내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3점(.76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4.02점(.758)으로 나타났고 ‘타인을 돕는 활동은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13점(.736), ‘다른 사람들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싶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05점(.769)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직무만족도 영역 결과 평균은 4.00점으로 나타나 협의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수행인력 설문 분석결과

□ 동 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의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7〉 응답자 특성

구분		N	%
소속	전담인력	26	18.4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57	40.4
	공무원	58	41.1
성별	남성	48	32.9
	여성	98	67.1
연령	30대 이하	57	39.3
	40대	57	39.3
	50대	28	19.3
	60대	3	2.1
학력	고졸	4	2.8
	전문대졸	9	6.2
	대졸	89	61.4
	대학원 재학 이상	43	29.7
전공	사회복지 전공	116	81.1
	타 전공	20	14.0
	해당사항 없음	7	4.9



구분		N	%
협업체 활동기간	1년 미만	60	41.7
	1년이상~2년 미만	53	36.8
	2년 이상~3년 미만	23	16.0
	3년 이상	8	5.6
지역구분	동 구	34	23.4
	중 구	30	20.7
	서 구	39	26.9
	유성구	20	13.8
	대덕구	22	15.2
공모사업 참여시기	2018년부터	66	47.8
	2019년부터	48	34.8
	해당사항 없음	32	17.4
공무원만 해당			
직급	6급	22	37.9
	7급	23	39.7
	8급 이하	13	22.4
직렬	사회복지직	51	87.9
	기타 직렬	7	12.1

먼저 소속을 살펴보면, 전담인력의 경우, 26명(18.4%),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57명(40.4%), 공무원 58명(41.1%)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는 구 소속 1명(1.7%), 동 소속 57명(98.3%)이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은 48명(32.9%), 여성은 98명(67.1%)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은 4명(2.8%), 전문대졸은 9명(6.2%), 대졸은 89명(61.4%), 대학원 재학 이상은 43명(29.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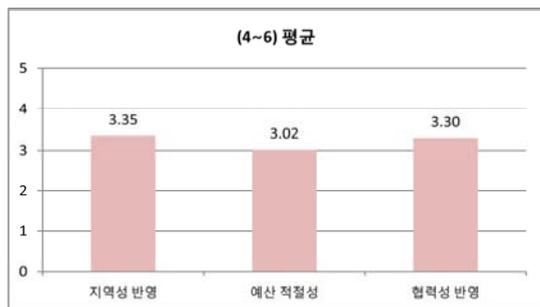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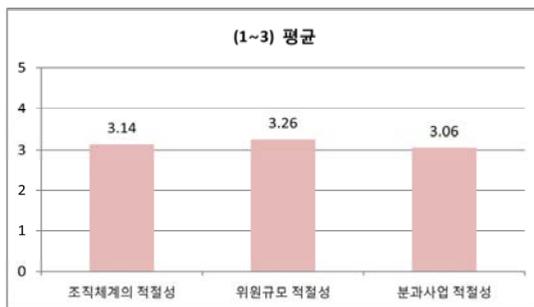
이어서 전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공자가 116명(81.1%), 타 전공자가 20명(14.0%), 해당사항 없음은 7명(4.9%)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체 활동기간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 60명(41.7%), 1년 이상 ~ 2년 미만이 53명(36.8%), 2년 이상 ~ 3년 미만이 23명(16.0%), 3년 이상이 8명(5.6%)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가 34명(23.4%), 중구는 30명(20.7%), 서구는 39명(26.9%), 유성구는 20명(13.8%), 대덕구는 22명(15.2%)으로 결과 값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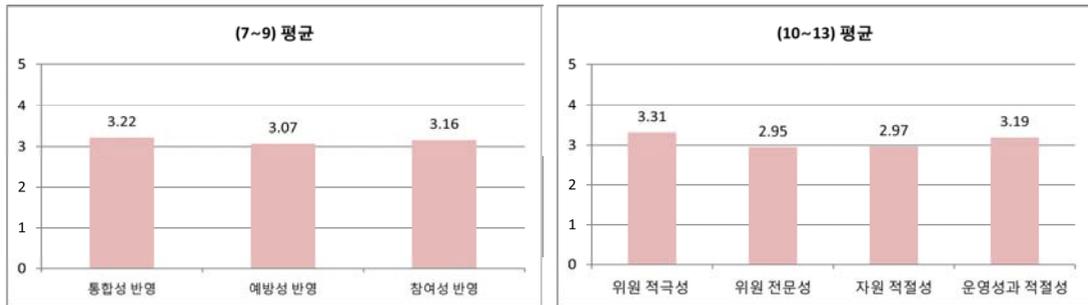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급과 직렬의 특성을 정리하면, 직급의 경우는 6급 이상은 22명(37.9%), 7급은 23명(39.7%), 8급 이하는 13명(22.4%)으로 나타났으며, 직렬의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51명(87.9%), 기타 직렬이 7명(12.1%)으로 나타났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조직체계의 적절성	3.14점 (.937)	146명	6명 (4.1%)	28명 (19.2%)	61명 (41.8%)	42명 (28.8%)	9명 (6.2%)	
2 위원규모 적절성	3.26점 (.839)	146명	2명 (1.4%)	25명 (17.1%)	58명 (39.7%)	55명 (37.7%)	6명 (4.1%)	
3 분과사업 적절성	3.06점 (.952)	144명	9명 (6.3%)	30명 (20.8%)	53명 (36.8%)	48명 (33.3%)	4명 (2.8%)	
4 지역성 반영	3.35점 (.907)	146명	3명 (2.1%)	23명 (15.8%)	51명 (34.9%)	58명 (39.7%)	11명 (7.5%)	
5 예산 적절성	3.02점 (.928)	146명	7명 (4.8%)	33명 (22.6%)	63명 (43.2%)	36명 (24.7%)	7명 (4.8%)	
6 협력성 반영	3.30점 (.978)	146명	4명 (2.7%)	29명 (19.9%)	45명 (30.8%)	55명 (37.7%)	13명 (8.9%)	
7 통합성 반영	3.22점 (.909)	145명	3명 (2.1%)	30명 (20.7%)	52명 (35.9%)	52명 (35.9%)	8명 (5.5%)	
8 예방성 반영	3.07점 (.903)	145명	2명 (1.4%)	39명 (26.9%)	60명 (41.4%)	35명 (24.1%)	9명 (6.2%)	
9 참여성 반영	3.16점 (.932)	146명	3명 (2.1%)	35명 (24.0%)	52명 (35.6%)	47명 (32.2%)	9명 (6.2%)	
10 위원 적극성	3.31점 (.929)	146명	4명 (2.7%)	25명 (17.1%)	49명 (33.6%)	58명 (39.7%)	10명 (6.8%)	
11 위원 전문성	2.95점 (.908)	146명	6명 (4.1%)	39명 (26.7%)	65명 (44.5%)	29명 (19.9%)	7명 (4.8%)	
12 자원 적절성	2.97점 (.878)	146명	5명 (3.4%)	39명 (26.7%)	61명 (41.8%)	37명 (25.3%)	4명 (2.7%)	
13 운영성과 적절성	3.19점 (.842)	145명	2명 (1.4%)	29명 (20.0%)	59명 (40.7%)	50명 (34.5%)	5명 (3.4%)	
전체 평균	3.15점	146명	-					





〈그림 4-1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먼저, ‘동 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평균 3.14점(.937)으로 나타났으며, ‘동 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경우 평균은 3.26점(.83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 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06점(.952)으로 나타났으며, ‘동 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은 3.35점(.907), ‘동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은 3.02점(.928), ‘동 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경우는 3.30점(.97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동 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경우 평균은 3.22점(.909)의 값이 나타났으며, ‘동 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경우에는 3.07점(.903), ‘동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경우는 3.16(.932)점의 결과 값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31점(.929), ‘동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2.95점(.878),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2.97점(.878), ‘동 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19점(.84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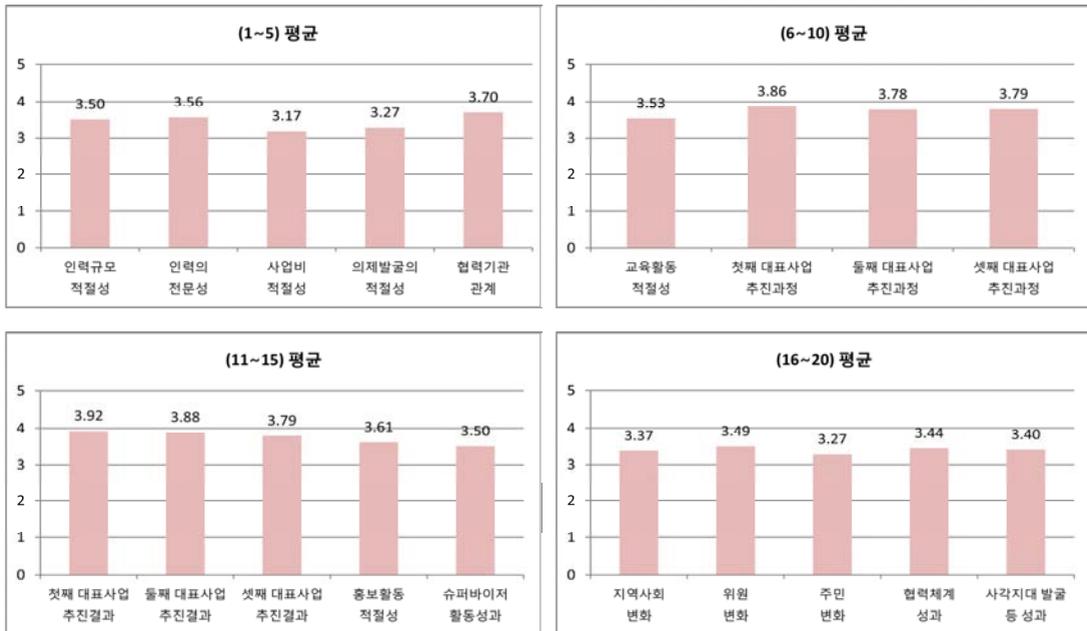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전체 평균은 3.15점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평가를 보인 항목은 위원 전문성(2.95점), 자원 적절성(2.97점), 예산 적절성(3.06점), 분과사업 적절성(3.06점)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인력규모 적절성	3.50점 (.873)	107명	2명 (1.9%)	11명 (10.3%)	36명 (33.6%)	48명 (44.9%)	10명 (9.3%)	
2 인력의 전문성	3.56점 (.916)	106명	-	13명 (12.3%)	39명 (36.8%)	36명 (34.0%)	18명 (17.0%)	
3 사업비 적절성	3.17점 (.953)	145명	7명 (4.8%)	25명 (17.2%)	58명 (40.0%)	46명 (31.7%)	9명 (6.2%)	
4 의제발굴의 적절성	3.27점 (.841)	146명	2명 (1.4%)	23명 (15.8%)	63명 (43.2%)	50명 (34.2%)	8명 (5.5%)	
5 협력기관 관계	3.70점 (.782)	146명	1명 (0.7%)	6명 (4.1%)	49명 (33.6%)	70명 (47.9%)	20명 (13.7%)	
6 교육활동 적절성	3.53점 (.773)	145명	-	12명 (8.3%)	57명 (39.3%)	63명 (43.4%)	13명 (9.0%)	
7 주관식	-	-	-	-	-	-	-	
8 첫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86점 (.721)	131명	-	4명 (3.1%)	32명 (24.4%)	73명 (55.7%)	22명 (16.8%)	
9 둘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78점 (.789)	126명	-	7명 (5.6%)	35명 (27.8%)	63명 (50.0%)	21명 (16.7%)	
10 셋째 대표사업 추진과정	3.79점 (.729)	121명	-	6명 (5.0%)	29명 (24.0%)	70명 (57.9%)	16명 (13.2%)	
11 첫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92점 (.746)	129명	-	3명 (2.3%)	32명 (24.8%)	66명 (51.2%)	28명 (21.7%)	
12 둘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88점 (.728)	124명	-	4명 (3.2%)	29명 (23.4%)	69명 (55.6%)	22명 (17.7%)	
13 셋째 대표사업 추진결과	3.79점 (.787)	121명	-	9명 (7.4%)	26명 (21.5%)	68명 (56.2%)	18명 (14.9%)	
14 홍보활동 적절성	3.61점 (.791)	146명	-	10명 (6.8%)	55명 (37.7%)	63명 (43.2%)	18명 (12.3%)	
15 슈퍼바이저 활동성과	3.50점 (.786)	143명	-	13명 (9.1%)	59명 (41.3%)	58명 (40.6%)	13명 (9.1%)	
16 지역사회 변화	3.37점 (.814)	146명	1명 (0.7%)	19명 (13.0%)	60명 (41.1%)	57명 (39.0%)	9명 (6.2%)	
17 위원 변화	3.49점 (.824)	146명	1명 (0.7%)	16명 (11.0%)	52명 (35.6%)	65명 (44.5%)	12명 (8.2%)	
18 주민 변화	3.27점 (.810)	146명	3명 (2.1%)	18명 (12.3%)	67명 (45.9%)	52명 (35.6%)	6명 (4.1%)	
19 협력체계 성과	3.44점 (.813)	146명	-	17명 (11.6%)	61명 (41.8%)	55명 (37.7%)	13명 (8.9%)	
20 사각지대 발굴 등 성과	3.40점 (.843)	146명	-	24명 (16.4%)	50명 (34.2%)	62명 (42.5%)	10명 (6.8%)	
전체 평균	3.57점	146명	-					

※ 질문 1번과 2번의 경우,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10개 동은 답변하지 않았음



〈그림 4-16〉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먼저, ‘전담인력 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3.50점(.873)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56점(.916), ‘활성화사업비는 적절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17점(.9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27점(.841)이었으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70점(.782),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53점(.7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86점(.721),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78점(.789),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79점(.72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92점(.746)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88점(.728),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79점(.78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61점(.791)이었으며, ‘민관협력 슈퍼바이저의 활동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50(.7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37점(.814)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49점(.824),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은 3.27점(.810)의 평균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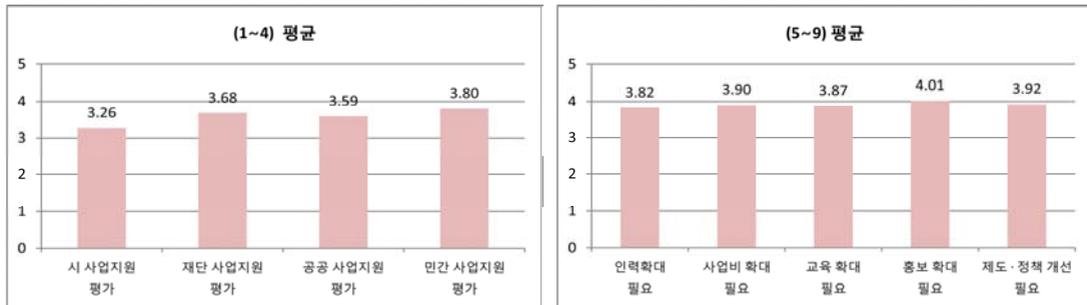
다음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은 3.44점(.81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3.40점(.843)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역 전체 평균은 3.57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사업비 적절성(3.17점), 주민 변화(3.27점) 등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개선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시 사업지원 평가	3.26점 (.773)	145명	2명 (1.4%)	17명 (11.7%)	73명 (50.3%)	47명 (32.4%)	6명 (4.1%)
2 재단 사업지원 평가	3.68점 (.740)	146명	1명 (0.7%)	11명 (7.5%)	47명 (32.2%)	75명 (51.4%)	12명 (8.2%)
3 공공 사업지원 평가	3.59점 (.776)	146명	1명 (0.7%)	11명 (7.5%)	47명 (32.2%)	75명 (51.4%)	12명 (8.2%)
4 민간 사업지원 평가	3.80점 (.660)	146명	-	2명 (1.4%)	43명 (29.5%)	83명 (56.8%)	18명 (12.3%)
평균	3.58점	146명	-				
5 인력확대 필요	3.82점 (.828)	146명	-	9명 (6.2%)	38명 (26.0%)	69명 (47.3%)	30명 (20.5%)
6 사업비 확대 필요	3.90점 (.750)	146명	-	5명 (3.4%)	34명 (23.3%)	78명 (53.4%)	29명 (19.9%)
7 교육 확대 필요	3.87점 (.738)	145명	-	3명 (2.1%)	41명 (28.3%)	73명 (50.3%)	28명 (19.3%)
8 홍보 확대 필요	4.01점 (.762)	144명	-	4명 (2.8%)	29명 (20.1%)	73명 (50.7%)	38명 (26.4%)
9 제도·정책 개선 필요	3.92점 (.746)	145명	-	1명 (0.7%)	43명 (29.7%)	67명 (46.2%)	34명 (23.4%)
10 주관식	-	-	-	-	-	-	-
평균	3.90점	145명	-				



〈그림 4-1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먼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26점(.773)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68점(.740), ‘자치구(洞 행정복지센터)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 평균은 3.59점(.776),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66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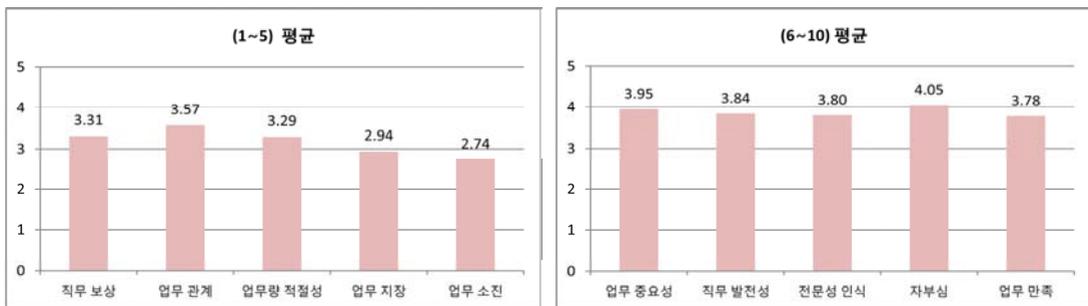
다음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2점(.828)로 나타났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0점(.75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7점(.738),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4.01점(.76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2점(.746)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평가 영역의 전체 평균은 3.58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개선 영역의 전체 평균은 3.90점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과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 영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직무 보상	3.31점 (.844)	86명	2명 (2.3%)	8명 (9.3%)	44명 (51.2%)	25명 (29.1%)	7명 (8.1%)	
2 업무 관계	3.57점 (.888)	86명	2명 (2.3%)	7명 (8.1%)	27명 (31.4%)	40명 (46.5%)	10명 (11.6%)	
3 업무량 적절성	3.29점 (.897)	85명	2명 (2.4%)	13명 (15.3%)	34명 (40.0%)	30명 (35.3%)	6명 (7.1%)	
4 업무 지장	2.94점 (.831)	86명	4명 (4.7%)	20명 (23.3%)	39명 (45.3%)	23명 (26.7%)	-	
5 업무 소진	2.74점 (.785)	86명	5명 (5.8%)	25명 (29.1%)	43명 (50.0%)	13명 (15.1%)	-	
6 업무 중요성	3.95점 (.734)	86명	-	4명 (4.7%)	13명 (15.1%)	52명 (60.5%)	17명 (19.8%)	
7 직무 발전성	3.84점 (.749)	86명	-	4명 (4.7%)	20명 (23.3%)	48명 (55.8%)	14명 (16.3%)	
8 전문성 인식	3.80점 (.720)	85명	-	4명 (4.7%)	20명 (23.5%)	50명 (58.8%)	11명 (12.9%)	
9 자부심	4.05점 (.667)	86명	-	1명 (1.2%)	14명 (16.3%)	51명 (59.3%)	20명 (23.3%)	
10 업무 만족	3.78점 (.676)	86명	-	1명 (1.2%)	28명 (32.6%)	46명 (53.5%)	11명 (12.8%)	
전체 평균	3.53점	86명	-					



〈그림 4-1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

공무원을 제외한 전담인력과 민관협력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에게 부여된 업무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 편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31점



(.844)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가 바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57점(.888), ‘내가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량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29점(.89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정적, 사무적인 일이 많아서 내가 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는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2.94점(.831)으로 나타났으며 ‘나의 업무는 소진율이 높다.’라는 문항의 경우 2.74점(.785),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95점(.734)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의 직무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편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4점(.749)이며, ‘내가 하는 일은 전문적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0점(.720)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경우 평균은 4.05점(.667)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78점(.676)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핵심 수행인력인 전담인력과 민관협력 슈퍼바이저의 직무만족도 전체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중요성(3.95점)과 자부심(4.05점), 직무 발전성(3.84점) 등의 항목은 높게 나타난 반면, 업무소진(2.74점)과 업무지장(2.94점)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별 양적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비교

□ 대상별 양적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표 4-32〉 구 협의체 위원 조사결과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 수	평균	N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규모,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지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 협의체)	16	3.99	116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체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기타활동)	19	3.94	116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4	3.88	111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5	4.18	111
	소계 및 평균(개선 제외)	44	3.94	

○ 조사대상 : 자치구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공무원)

〈표 4-33〉 구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공무원) 조사결과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 수	평균	N
구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규모,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지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 협의체)	16	3.41	11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체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기타활동)	19	3.85	13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4	3.88	13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5	3.98	13
	직무만족도	- 보상, 관계, 업무량, 업무지장, 소진, 중요성, 발전성, 전문성, 자부심, 만족도	10	3.64
소계 및 평균(개선 제외)		54	3.70	

○ 조사대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표 4-34〉 동 협의체 위원 조사결과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 수	평균	N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수준,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자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	13	3.64	1,020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체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슈퍼바이저)	19	3.66	1,006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4	3.60	1,003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5	3.77	1,004
직무만족도	- 성취감, 자부심, 중요성, 가치, 권유	5	4.00	994
소계 및 평균(개선 제외)		46	3.73	

○ 조사대상 : 동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표 4-35〉 동 협의체 수행인력(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조사결과

조사항목	질문내용	질문 수	평균	N
동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조직체계, 위원(수준, 적극성, 전문성), 분과, 예산, 자원 - 원칙준수(지역성, 협력성, 통합성, 예방성, 참여성) - 운영성과	13	3.15	146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투입(인력규모, 전문성, 사업비) - 과정(의제발굴, 대표사업 추진과정, 협력기관 관계, 교육활동, 홍보활동) - 성과(지역사회 변화, 위원 변화, 주민 변화, 협력체계, 동 협의체 운영지원, 대표사업 추진결과, 슈퍼바이저)	19	3.57	146
평가와 개선방안	- 사업지원(시, 재단, 공공, 민간)	4	3.58	146
	- 개선방안(인력확대, 사업비, 교육, 홍보, 제도 등) - 의견	5	3.90	145
직무만족도	- 보상, 관계, 업무량, 업무지장, 소진, 중요성, 발전성, 전문성, 자부심, 만족도	10	3.53	86
소계 및 평균(개선 제외)		51	3.46	

〈표 4-36〉 대상별 양적조사 분석결과 비교

구 분	구 위원	구 수행인력 (전담인력, 공무원)	동 위원	동 수행인력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인식과 평가	3.99점	3.41점	3.64점	3.15점
공모 인식	3.94점	3.85점	3.66점	3.57점
평가	3.88점	3.88점	3.60점	3.58점
개선	4.18점	3.98점	3.77점	3.90점
만족도	-	3.64점	4.00점	3.53점
평균(개선 제외)	3.94점	3.70점	3.73점	3.46점

* 5점 만점(1점 매우부정, 2점 부정, 3점 보통, 4점 긍정, 5점 매우긍정)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 협의회 위원들의 구 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99점,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94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88점과 4.18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구 협의회 위원들의 평가는 5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3.94점으로 긍정 혹은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 협의회 수행인력인 전담인력과 공무원들의 구 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41점, 구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85점, 평가와 개선방안의 경우는 평균 3.88점과 3.98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타나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과 공무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70점에 가까운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 협의회 위원들의 동 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64점,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66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60점과 3.77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동 협의회 위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73점으로 4점에 가까운 긍정 혹은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 협의회 수행인력인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들의 동 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15점, 동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평균 3.57점, 평가와 개선방안은 평균 3.58점과 3.90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동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들은 5점 만점기준에서 3.46점에 가까운 만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동 협의회 위원들과 비교할 때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영역의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민관협력 활성화 성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구 협의체의 성과가 동 협의체의 성과보다 조금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질적조사 결과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질적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기관별 역할수행,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등 4개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제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4-37>와 같다.

<표 4-37> 민관협력에 대한 주제 분석

주제	하위주제	주요내용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민관협력의 당위성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발굴과 민간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인식 다양한 체계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인식
	민관협력 사업간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또는 법률에 의거한 유사 민간 활동들의 중복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민간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인식
기관별 역할수행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역할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도모하는 역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주제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보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실무담당자의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민관협력사업 수행
	지역사회조직 및 사례관리, 협의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를 통해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는 주요 주체로서 역할 자치구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적인 책임성 담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성과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참여의 의미가 아닌 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과 수행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기능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의미로 인식
	민과 관의 관계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주체들의 정례화 된 회의를 통해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실질적인 협업관계로 인식 민, 관이 서로의 역할과 강점을 이해함으로써 민관협력 관계가 공고해짐



주제	하위주제	주요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인 자원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경험을 통해 마을의 복지주체로서 인식 확장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동원이나 감독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참여의 주체로 의미를 가지게 됨
개선방안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역할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원과 새로운 활동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위원구성 필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위원 ‘신청제’ 나 ‘추천제’ 등 공개적 참여 기회제공
	인력과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의 사업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배치 필요 전문적인 민관협력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자유와 권한 보장 민관협력의 주요체계인 민간기관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 민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전형 평가체계 마련
	민관협력에 대한 방향과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민관협력 관련 사업들 간 조정을 위해 공론의 장을 통해 의견수렴 필요

2. 주제별 분석내용

1)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실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두드러진 전달체계의 변화는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다(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의 당위성 공감

FGI에서도 공공과 민간 모두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공공도 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공무원을 많이 증원 하다 보니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일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이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을 공동체 행사 때 참석은 하는데 근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문자인거죠. 같이 협업해서 '복지관이 이 부분을 좀 맡아서 해줘' 하면 할 텐데. 그래서 가도 그냥 행사장 한 번 돌아보고 인사 하고, 그 정도 밖에 못하는 거죠. 또 지사협 위원도 아닌데 제가 매번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게, 물에 기름 뜨듯이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F-2)

현재 동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해주어야 하고요. 또한 사례 및 자원 발굴 같은 일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민관협력은 안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쨌든 민관협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동이나 구나 협의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인식하는 단계이지.(C-4)

근데 민관협력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정말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주변만 대상으로 봤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물론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중략>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해야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으니까 어려울 뿐이지. 다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F-5)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복지욕구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포괄적인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FGI 참여자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 지역주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자체(읍·면·동)가 상호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갈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법적, 제도적 한계로 공공에서 개입하기 어렵거나 복잡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체계가 개입되어야 하는 사례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민·관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였다.

기존에도 있었긴 있었지만 거점복지관 사업으로 뭔가를 해야 하다 보니 좋은 사업계획서를 같이 공유를 해 보았을 때 그래도 서로 알아야 좋으니까요. 전에 대상자가 고독사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50대-60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진행했었고, 올해(거점복지관 사업 시작)에는 한 부모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거점복지관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B-10)

사람 한 분이 산속에서 발견이 되어서요. 주민등록도 안 되신 분이었는데, 지사협 통해서 지원을 신속히 받게 했어요. 일단 주민등록이 없으니 통장도 못 만들고, 수급자격도 못 받으니까(공공에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움)... 지사협 위원분들이 이분의 임시거처, 옷가지 등을 다 마련해주고. 의료 지원 및 기타 지원은 거점복지관이 보유한 자원으로 도와주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 되도록 준비하고. 또한 이 분을 저희가 후견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공공에서는 불가능해요. 일단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 공공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민관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E-5)

(2) 민관협력 사업 간 혼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민관협력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관협력의 시도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은 아니다.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는 민선 3기 핵심 사업으로 동 단위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복지만두레 사업이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복지만두레가 정착되어 온 과정에서 기존 자원봉사조직이나 민간복지조직들과의 위원과 역할 중복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안성호 외, 2012).⁷⁾ 이러한 상황에서 구와 동 단위의 법정 민관협력 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등장하면서 민관협력 사업 간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FGI에서는 민관협력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례에 의거한 단체들과 법률에 의거한 단체들의 활동들 간 중복과 혼란이 확대되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 초에 각 공모사업을 단체별로 신청 받는데, 저희도 지사협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만두레 쪽으로 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사협만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밀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사협은 작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을 받아 모금된 돈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물품지원사업이 아닌 제대로 좀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하고 싶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단순 물품지원 사업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리다보니 만두레와 다른 봉사단체와 지사협의 차이점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B-4)

자생단체 분들을 대하는 것이 피로도가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할 사람은 극히 적는데 단체는 많아지니 공무원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설사 전담인력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점을 컨트롤 할 수 있을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B-7)

게다가 민관협력이 복지영역에서만 국한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 복지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지역사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 주민자치 등에서도 민관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지만 FGI 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를 수행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부처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사업으로 인지할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이 모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협력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7) 안성호, 광현근, 배용환, 이갑숙(2012). 대전 광역시 ‘복지만두레’ 사업의 진단과 발전전략. 대전복지재단 용역 보고서.



지금 민관협력 사업인지 마을공동체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사업이 발생하게 되고.(A-2)

요즘 그런 것을 공모사냥꾼이라고 해서 사업을 마구 따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을공동체에서도 따고 지사협에서도 따고, 이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A-4)

지사협에서 작년에 마을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 매우 활동적인 자생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사협 위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그 분들은 힘들겠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축으로 가고 있어요. 지사협 회의도 참석하고, 이분들과도 함께하고. 그런데 이 분들의 경우 이번에 마을에서 1,000~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던데. 그런데 지사협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 정도를 가지고 해야 하니.(E-4)

2) 기관별 역할수행

민관협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관협력의 부서와 주체도 다양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GI에서의 의견은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인정하며,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지만 긍정적이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시는 민관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서의 각 주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구·동)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지금까지 공공의 업무가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행정업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행정적 업무 뿐 아니라 직접적인 서비스 개입에도 관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은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민관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FGI에서는 공공의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민관협력 체계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기관 및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고, 특히 취약계층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기관



에서도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공동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들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행정적 지원으로 주요하게 인식된다.

지역주민하고 관계 맺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그럴지만 아직까지도 인원을 모집하고 참여시키는 데에는 저희 복지관보다 오히려 동 행정복지센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00번 연락하는 것 보다 계장님이 한 번 연락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잘돼요. 처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계장님 덕분에) 그게 되다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진행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공무원과의 관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에 민관협력 전담인력으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 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많이 오갈 수 있는 원가를 찾아야겠다.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G-3)

어쨌든 공공이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공공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의 담당자가 어떠한 마인드나 의지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 사업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고 활발해 질 수도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똑같이 지사협에 위원들이 오셔서 회의를 참여하잖아요. 근데 소집이 어렵거든요. 그거 다 동 행정복지센터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저희도 지사협에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등 몇 가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회의의 모임을 끌고 가는 것은 공무원이 하니까 그들이 중요하죠.(E-4)

또한 FGI 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행정적인 기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활동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거나, 민관협력의 동기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공을 통해 주민들이 민간기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별적인 자생조직과 같은 이해관계⁸⁾를(김필두 외, 2008; 김승권 외, 2015 재인용) 초월한 공공성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도 공공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 지사협 위원들 구성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명되어서 참여하게 된 분들이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에요. 동 지사협 위원들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다보니 구 지사협 위원들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와 중간 진행상황 그리고 겨우 결과보고만 받는 정도예요. 이들은 지사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설명을 드려도 처음 듣는 이야기로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일을 하다보면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정도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교육이나 간담회 이러한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에는 이 지사협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 자체가

8) 김필두 외(2008). 사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이 일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C-2)

함께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민과 관 각각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준다거나, 공동의 행사를 한다거나, 마을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었던 경험을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지사협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우리가 뭔가 해볼까 하는 동기가 강화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 동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E-5)

교육이나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해서, 연초에 자꾸 모이고, 회의도 정례화 시키고. 사업도 전년도 말쯤에 지역 내 자생단체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욕구조사도 좀 해보고. 꽃길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새마을 협회와 함께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무산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위원 한분이 그거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마을에서 놀자는 프로그램(아동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가 하였던 사업인데, 예산도 없고 중심축을 이끌어주는 곳도 없으니까 아이들도 아예 안하려고 하였는데 저희가 예산도 좀 책정하고 지원도 해줘서 지금은 사업이 살아났고, 현재 40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 올해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위원들이 사업을 끌어들려고 하다 보니 사업이 멈추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사협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좀 어려울 것 같고, 경험을 하다보면 중요성과 필요성이 조금 더 체감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E-4)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수행의 주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추진체이다.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군·구의 장이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특히 FGI 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과 관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민간과 공공이 보다 원활히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공공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원들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민관협력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구와 동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써 작동하고 있다.

일단 저희들은 지원사업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연차적 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는 인적구성 역량 강화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식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했다면, 올 해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체적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민간차원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는 민에서 추천을 해주요. 그럼 거기(공공)에서 받아서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결국에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추천은 하고 있어요. <중략> 관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니 민의 추천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C-4)

(공공)위원장님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셨어요. 이후 세 번째 계장님 오셨는데도 민간 위원장님을 통해서 계장님과 소통하다 보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 위촉도 자생단체보다는 주민을 좀 데리고 들어오자 해서 병원 원무과장, 어린이집 원장 등 물론 통장님들도 있지만. 그래ども 속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되게 기회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F-4)

강사 섭외 이런 것도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좀 들었거든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 지와 같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분들은 다 부장급 그러시니까. 웬만큼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을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지사협) 공모사업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거의 다 포함이 되어있고. 지역주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 실무협의체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한 회기 할 때마다 200-300명 정도 인원이 오니까요. 감당하기에 버거우니 진행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H-4)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여 자생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여 아직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는 지사협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사협 위원들이 주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와 복지관이 같이 준비한 것을 위원분들이 심의해서 결정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동하고 복지관에서 해요. 위원님들은 참여만 하시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예를 들면 나눔 행사를 할 때 준비 다 되면 위원님들이 오셔서 참여만 하고, 전달은 동 직원들이 다 하고요. 일부는 하시기도 하지만. 만약 20가구면 5가구는 위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해요. 웬만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하다보니까 건강하신분도 가져다 드려야 해요. 실질적으로는 복지관과 관의 일이고, 동 협의체 위원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도.(B-6)

(3)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수행인력 - 지역사회조직과 사례관리, 협의체 활동지원

① 거점복지관 슈퍼바이저와 전담인력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은 그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도 특정 인구집단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전문기관들이다. 이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중요시 한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의 포괄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및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공공영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FGI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사례관리는 민간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 사례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서로를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요한 체계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전혜성 외, 2018)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점복지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올해는 너무 큰 욕심내지 말고 지사협 위원들에게 이러한 것(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사례관리 필요한 케이스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해서 협업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관심이 좀 생긴 것은 맞아요.(E-3)

작년 8월부터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임자부터 복지관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되어 정기적으로 주 1회 복지관과 함께 사례관리를 나갔어요. 저희의 행정력과 복지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 복지관의 정서적인 서비스를 함께 연계하여 진행했는데 주민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경력이 높다보니 복지관이 먼저 사업을 제시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라가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실태조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가 좋아 이러한 분위기가 협의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또 복지관에서 ‘행복한 하루’라고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해보고 싶은 경험들을 욕구조사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려고 하고 있어요(공적 자원과 복지관이 협업하여).(B-9)

또한 최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의 복지공동체 실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조직화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데(신재은 외, 2016),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주민들의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 왔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FGI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기반 한 거점복지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 중에 '마을에서 놀자'라고 월 1회 아이들 줄넘기도 하고 이런 놀이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번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의 자생단체가 해왔던 것 외에 정말 마을 주민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중략> 사실은 중간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하고, 마을 공동체라는 주민들하고, 복지관하고. 어느 때에는 저희가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대변해 줄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대변해 줄때도 있고.(F-1)

복지관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발굴된 세대를 복지관에 데려가서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서,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공공)만 갖고 있잖아요. 또한 복지관은 매우 활발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저희 공무원들과 다르거든요. 따라서 거점복지관은 발굴된 사례대상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 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A-3)

민관협력사업 중에 좋은 예가 뭐였나면 전담인력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주관 행사기간 동안 생필품 등을 학생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와 협의하고, 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거예요. 저희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만 했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물품을 모아 온 것을 현금금액으로 확인해보니 1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관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동시에 아이들에게 기부에 대한 생각도 물어보고 교육을 진행했어요. 또 자연스레 부모님께도 안내문을 드리니 지역사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도 되고.(B-6)

② 자치구 전담인력

자치구 전담인력은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 배치되었으나 공공조직의 인력도 아니고, 민간기관의 인력도 아닌 지위로 역할과 기능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자치구 전담인력의 경우 구의 여건과 인식에 따라 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체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관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구도 있어 이런 경우에 역할과 기능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직 안에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나마 공공조직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전담인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제(자치구 전담인력)가 지금 희망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사협은)기획팀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것을 파악하기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분과 어느 정도 협력하는 게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가버리시니. 그러다보니까 새로 오신 분에게 뭐 이야기를 해도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깐.(H-1)



업무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보니 일 자체도 그렇다고 느꼈거든요.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정말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매 뉴얼에만 나와 있는 역할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복지기획의 업무보조 느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주사가 하고 있는 일은 선생님이 다 해야 해’ 이러셨어요. 지금은 담당 주사님이 거의 메인(기안, 계획 등)을 하고 저는 약간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문이 넘어와도 주사님이 확인 한 뒤에 저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이어서. 거점복지관 회의라든지 프로그램 계획들을 담당 계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죠. ‘이거 하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하시던지 ‘이거 프로그램 좀 하나 짜주세요, 그러면 제가 짜서 계장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과장님께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어디에도 저의 흔적은 남지 않아요. 올해는 일단 이렇게 가지만, 일을 배우고 나면 내년부터는 지사형 전체의 일을 전담 인력인 제가 다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회의부터 모든 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H-2)

공무원의 특성은 계속 자리가 이동되니. 적극적이신 분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계속 가야하는 사업이라면 한 명은 한자리에 꾸준히 이끌어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담인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H-3)

3)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성과

민관협력의 당위성은 대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민관협력의 실체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FGI에서도 지금 민관협력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고, 반면 성급하게 성과와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변화

대전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했던 경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관협력이 관이 기획하고, 민간은 단순하게 참여하는 데 의미가 컸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간 자원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FGI 참여자들은 기존의 민관협력 사업(ex: 복지만두레)과는 다르게 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지역사회의 민간기관과의 민관협력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을 FGI에서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실험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협력이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민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같이 모여서 해결할 것인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게 민관협력인데. 만두레나 동 협의체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다 다른 형태이거든요. 민관협력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C-4)

과거 동 지사협 할 때에는 만두레랑 차별성은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구 지사협의 경우에는 마을복지계획도 세우고 있고, 마을 주민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동 지사협의 경우에는 (아직은)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점복지관에서 이번에 보니까 7월 달에 ****복지관에서 마사회에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동,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직접 거점복지관으로 가서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50세 대에게 동별로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A-3)

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는 올 6월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을 만들기 위한 발굴 작업을 위해 같이 원탁회의를 했어요. 또 올 해 초에는 실무자 간담회 하면서 (사업방향)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을 해서, 거점복지관 쪽에서 작은 사업 가져가고, 구에서는 좀 큰 것들 위주로 가져고 결정했어요. 어린이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의제 같은 것들은 정책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이 되기도 했어요.(H-3)

FGI 참여자들의 진술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민관협력 구심점으로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민관협력의 범위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⁹⁾를 구축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다 지사협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거든요. 무슨 씨앗, 줄기 이런 사업들. 이번에 구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들에다가 저희 복지관이 지역 주민들하고 했던 사업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E-2)

마을 공동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회기 했어요. 그러니까 10회기 중에 2회기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마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사협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몇 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교육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도 신생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에서 다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복지관도 없는 곳이어서.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중장년층까지 확대가 되었어요.(G-4)

9)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2) 민과 관의 관계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한 주요한 변화로 민과 관의 관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의 주체가 구에서 동으로 보다 현장밀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도 민간기관 및 주민참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기관도 관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업의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 단위의 민관협력 요구는 민관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손지현, 2018).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협력 경험이 없었던 주체들이(공공, 민간기관, 지역주민등) 정례화 된 회의와 함께 기획한 사업 등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이 개선되었다.

저희와 복지관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고, 또한 동 주민들과 복지관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A-2)

저희도 월 1회 거점복지관과 함께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해요. 처음에는 저희도 참 어색했는데 자주 만나고, 재단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복지관도 사업을 해야 하고. 저희도 맞춤형 팀이 생기면서 성과가 필요하게 되면서 또 자주 만나고 업무공유를 하다 보니 이것은 너희가 하면 좋고, 이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B-6)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였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인식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관에서는 민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만 있다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과정에 함께 함으로써 민간의 역할과 강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민관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의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의지도 다르고. 저희는 복지관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지만 동의 내부적 관계 등의 한계 때문에 복지관과 함께 맞춰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협의체나 이러한 것들이 동 담당자들의 역량이 크게 미치지 때문에 <중략> (거점복지관과 민관협력이)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복지관의 기대치에 동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동 복지관과 함께 하면서 전반적으로 더욱 활발해지기는 했다고 생각해요.(B-2)



저희는 동네의 세부적인 소식까지는 잘 모르는데 복지관이 동네 소식을 빨리 알려주니까 저희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서비스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쪽 문제가 무엇이라면 그 동안 잘되고 있었지만 홍보할 곳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구청에 홍보실 있잖아요. 거기 이용해서 사용하여 지금은 소식도 알리고 있고. 각자 역할을 담당해주고 하니,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아마 계속 이어져갈 것 같아요.(B-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관과 함께하는 논의와 실행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에는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에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민관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장을 위한 시간만 주어진다고 저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지만 FGI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역량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FGI의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민관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민과 관,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결국 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스스로가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사협 위원들을 만나는 방법 중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든 (민간기관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개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그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역량강화교육을 동마다 딱 1회씩만 진행하였는데,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다 간담회여서 못 보였고. 매번 정례회의 때마다는 만나는데 제가 그 안에 끼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위원들에게 말을 걸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매번 조심스럽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보니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동'에 지원을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조금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이번에 프로그램하면서 그분들이 긍정적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거나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킴.(G-2)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해봤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런 활동(프리마켓)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을학교를 통해 들어서 지사협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중점으로 두는게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프리마켓이나 마을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요. 그 기금으로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욕구를 해결하거나, 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정보가 있으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좋은 협력 관계인 것 같아요.(D-4)

특히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구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의사결정 경험은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경험으로 언급되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의식이 확장되어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올해부터는 민에서 올려놓은 정책을 주민참여 예산처럼 예산을 요청하고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 분과에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결국 민의 힘이 커져야 한다고 봐요.(C-4)

작년 원탁회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가 생각하는 마을에 관련된 의제를 도출하는 회의를 했고요, 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는 올 6월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발굴 작업을 위해 같이 원탁회의를 했어요. 또 올 해 초에는 실무자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방향)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을 해서 거점복지관 쪽에서 작은 사업 가져가고, 구에서는 좀 큰 것들 위주로 가져오고 결정했어요.(H-3)

마을 주민들이 해당 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마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되었거든요. 이것을 꽃피워야 하는데.(A-4)

(4)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변화 -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기반마련

민관협력 활성화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역량강화일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이 주관하는 사업에 민간이 동원되거나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을 공공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등의 관계만 경험하던 것에서 공공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협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⁰⁾. 또 순수한 민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민간의 역할과 상호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일 등을 알아가는 학습의 과정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10) 참고자료와 유사한 경험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찾아가는 洞 행정복지센터 민관협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저희는 **복지관이 거점복지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한 3~4회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복지재단에서 오셔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는데, 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획 단계부터 복지관에서 도와주다보니 비록 지금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기획에 대한 역량이 생기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긍정적입니다.(D-1)

그 사업(공모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고,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무조건 봉사자가 남한테 주기만 하는 것 보다는 내가 뭔가 소소한 거지만 얻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교육이 굉장히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물론 지사협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결국은 마을 주민들도 잠재적인 지사협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싶더라고요.<중략>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회기를 하다보니깐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주민들도 꽤 많이 참석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깐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서로 힘든 부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G-4)

4) 개선방안

FGI 참여자들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민관협력을 이루기 위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있다.

(1)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역할규정

①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초기에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도 미흡하고, 민관협력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없이 법적근거에 의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명목적으로만 구성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력으로 업무가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이라는 추가적인 과업이 생기게 되었다는 피로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FGI 참여자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위원구성을 지적한다.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위원들은 우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고,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새로운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유연한 생각과

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이다. 이러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 참여도 중요시 되었고, 특히 민간 위원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한 동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깐 지사협 위원들이 다 유지들이시거나 통장님 다 이런 분들이시다 보니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동 주사님들 자체도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한 동은 조심스러워서 직접 통화를 잘 안 해요. 거기는 동에서 직접 통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 한 동은 자유롭고 활성화되어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동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분들도 있고, 관심도 있고, 복지 쪽으로도 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깐 자발적이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고 발 벗고 나서세요. 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 마인드가 딱 잡혀있어요, 이 지사협이 뭘 하는지를. 반면 다른 한쪽 동은 생업에 너무 바쁘시다보니깐. 지사협이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G-4)

또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적으로 위원 구성을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인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제와 추천제 등이 제안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여자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임명중심으로 되다보니 사실은 공무원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죠.(C-2)

저희는 민에서 추천을 해줘요. 그럼 거기에서 받아서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결국에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추천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는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구 지사협이든, 동 지사협이든. 내년에는 그런 구조로 가려 해요 저희는 그리고 관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니 민의 추천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C-4)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역량강화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명시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들이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체득하고, 역할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협의체의 활동들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관협력 사업은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그 속도와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다양성이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상대적인 평가와 보상 보다는 경험의 공유와 축적이 우선되어야 함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기능 분화와 조율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거기 가면 책자를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필요한 것을 꼼꼼히 적어서 우리 동네랑 맞는게 있으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지사협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된 곳을 벤치마킹 하면 좋은 것 같아요.(D-9)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불만인 것은 이런 거예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기관이나 잘 하고 있는 슈퍼바 이저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 들의 답변은 결국은 '조금 더 열심히 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략> 이 일이 운으로 하는 것 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되다보니) 나름대로 맞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탓이든 공무원 이직 탓이든.(F-3)

저희는 나름대로 working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모아 구에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working그룹이 지금 1차년, 2 차년, 3차년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적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올 해는 차별화 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여기서 예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원해주어야 할 것인 무 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C-4)

저희는 올해부터 분과를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참여하도록. 예를 들어 저희 복지관 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통장님, 아파트관리소장님, 분과가 책임지고... 저희가 회원이 18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참여 안하는 사람 다 정리하고 분과도 구성을 했어요. 거기서 역할 강 제할당을 한 것이죠.(B-9)

(2) 인력과 예산확보

①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민관협력은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해 가는 과정 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가 요구되는 작 업이다. 따라서 관계성에 기반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보다 지속적으로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FGI 참여자들은 현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지원이 지속가능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전담인력에 대한 지위와 역할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됨을 지적하였다. 즉,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보다 지역사회조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또한 지속가능하게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는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의 지속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공로가 사라지지 않게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면 대전형 복지도 뭔가 보이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싶어요.(A-5)

민과 관의 접점이 무엇일지. 그게 만약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복지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나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업도 자체에 일도 많고 그러니, 주민자치회도 간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민과 관 사이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면.(B-10)

② 전문적 인력활용을 위한 지위와 권한 보장

민관협력은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체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인력구조가 필요하다. 즉 민관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FGI에서는 자치구 전담인력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의 특성을 갖는 공공 담당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또한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과 관의 접점에 위치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복지관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배정되어야 함을 중요시 하였다.

전담인력 채용도 사실 그래요. 처음 6개월짜리 뽑는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보니 누구든 오라고 문턱을 낮춰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복지관 인력 채용과는 기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공개 채용하는것도 아니고, 6개월짜리 뽑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전담인력도 복지관 직원과 어울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더라구요.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F-2)

하나의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복지관에 줬다면, 이 분이 전문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구심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자생단체 분들을 대하는 것이 피로도가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할 사람은 극히 적은데 단체는 많아지니 공무원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설사 전담인력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점을 컨트롤 할 수 있을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B-7)

이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지사협이 이렇게 까지 활성화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그런데 시스템 사용하는 것은 좀... 재단이나 시나 해서 그런 것 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문도 못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H-3)



또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관에 민관협력 담당 부서가 마련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어렵다면 민관협력 관련된 업무가 부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에서 민관협력과 관련된 업무가 인정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도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FGI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업무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민관기관의 입장에서는 평가 등에 인정받는 업무가 아니므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의 업무에 대한 지침과 평가지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전만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관에서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맡아서 하는 것도 부담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 물론 동별로 차이도 있고, 문제도 많고, 활동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E-5)

공공은 자신들은 이미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요. 정해진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본래 업무를 하기도 바쁘는데 일을 만들면 그분들의 역할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또 저희 민간기관도 지원대상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해요.(E-3)

복지관을 한 번 가봤었는데, 복지관의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그건 학계에서 와서 평가를 하잖아요. 공무원이 나가는 보는 것은 단순히 회계 부분이고. 그렇다면 학계에서 종합복지관평가지표에 이러한 것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A-1)

(3)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향과 지침 마련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은 민관협력과 관련된 모든 주체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민관협력의 경험을 축적해가는 초기단계에서 각 주체들은 민관협력의 성과와 산출 형식, 민관협력의 범위,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외의 타 민관협력과의 관계 등 민관협력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없는 상황을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유사한 사업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선, FGI에서는 조례에 의한 대전형 민관협력 모델과 법에 기반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개별 주체들은 유사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 민간의 참여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혼란을 공론화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분들(만두레)의 활동이 지사협 활동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대걸 구도처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 동에 지사협을 구성할 때 만두레에서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을 지사협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만두레 각 동에서도 목소리가 큰 만두레 회원들을 구에서 계속 설득을 해서 구 지사협과 합치도록 했어요. 이제 설득이 거의 다 되었고 남은 동에서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 흡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E-2)

또한 민관협력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등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에서는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공공의 민관협력 사업들에 민간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복을 피하기 어려워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민관협력은 인력과 재원의 투입까지 제한되어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에서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나 행안부의 조건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과로 앞으로 주민생활형서비스 인력 수요조사를 했어요. 자치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해준다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자체는 총액인건비가 있어서 인원을 마음대로 못 늘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줘야 하는데.<중략>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은 주민자치와 지사협이 동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는 보조금을 받는 간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봉사활동이잖아요. 참 갈 길이 머네요.(A-2)

근데 지사협에는 인건비 외에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키우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 자체적으로 복지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A-4)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민관협력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132명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예산은 평균 8천 6백만원 수준이다. 서비스 제공은 평균 1,152건에 2천 6백만원 수준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1,4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은 사각지대 발굴이 약 1,450건, 민간 자원발굴이 490건에 약 1억 2천 6백만원, 서비스연계는 약 7,600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민관협력 성과 분석은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이 병행되었는데, 양적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분석대상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공모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에 따라 총 4개 집단(구 협의체 위원, 구 협의체 수행인력(통합), 동 협의체 위원, 동 협의체 수행인력(통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별 양적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 5-1>와 같다.

<표 5-1> 대상별 양적조사 결과 비교

구 분	구 위원	구 협의체 수행인력	동 위원	동 협의체 수행인력
인식과 평가	3.99점	3.41점	3.64점	3.15점
공모 인식	3.94점	3.85점	3.66점	3.57점
평가	3.88점	3.88점	3.60점	3.58점
개선	4.18점	3.98점	3.77점	3.90점
만족도	-	3.64점	4.00점	3.53점
평균(개선제외)	3.94점	3.70점	3.73점	3.46점

* 5점 만점(1점 매우부정, 2점 부정, 3점 보통, 4점 긍정, 5점 매우긍정)



전체적으로 구 위원회 점수가 3.94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 위원회 점수가 3.73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구 협의회 수행인력(전담인력과 공무원) 그리고 동 협의회 수행인력(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 등의 순으로 점수가 제시되었다. 위원회들의 점수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전담인력 등 수행인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사업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협의회는 최근에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당수가 협의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 경우 만족도가 4.00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평가 개선에 대한 욕구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질적분석 결과의 경우,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영역에서 민관협력 과정에 다소 혼란은 있지만 당위성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의 성과로는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변화, 민과 관의 관계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관과 함께하는 논의와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량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과제도 있다. 우선,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핵심적으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협의체의 역할 정상화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침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도 제시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였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영역에 따라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절 제언

1. 총론: 민관협력 운영원칙에 따른 사업 추진

대전시 민관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민관협력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6대 운영원칙이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호호혜의 원칙, 상호의존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예산 적절성의 원칙 및 자율성의 원칙이 민관협력에서 적절히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전형 민관협력의 발전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민과 관이 교환하는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 발굴, 자원연계 등에 보다 강점이 있는 관과, 상담 및 사정, 서비스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에 보다 강점이 있는 민이, 각각의 강점이 민관협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업무 분장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형 민관협력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업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과 관, 모두 상대방의 강점과 민관협력이 상생의 길임을 인정하는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둘째, 상호의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대전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전담팀을 모두 기본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힘의 균형으로 상호의존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권역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이 있어서 민과 원활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전담팀을 단계적으로 모두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의존성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전담팀을 기본형으로 확대함에 있어서 복지팀장을 행정직이 아닌 복지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과 관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팀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직이 아닌 복지직을 복지팀장으로 전면 배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성의 원칙으로 각 동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의 주체들이 운영과 통제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대전시의 경우 5개 자치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만 수립할 뿐, 동별로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서구 정림동에서 정림복지관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가 공통으로 향후 3년간의 마을 복지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한 선례가 있다. 해당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양방에서 민주적으로 각각의 주체들이 계획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통제권을 공유하고, 마을계획이 민과 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전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동들이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방성의 원칙으로 민이 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및 공개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칭 ‘더불어 책상’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개방성의 원칙을 살릴 필요가 있다. 즉,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유효 책상을 1개 정도 비치하여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들과 보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월~금요일까지 날짜를 정해 놓고 월요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화요일에는 주민자치회, 수요일에는 노인복지관, 목요일에는 동 복지협의체, 금요일에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책상에서 본연의 업무를 관과 함께 공유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개방성을 통한 공유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칭 ‘대전형 자원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대전시 관내에 존재하는 관의 자원, 민의 자원 그리고 더 나아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자원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플랫폼 전산망을 구축하여, 좀 더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산 적절성의 원칙으로 민관협력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치구별로, 동별로 예산지원 현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대전시 차원에서 민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5개 자치구와 동 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정부 모금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대전시 민관협력의 가장 큰 제한점 중에 하나는 동 협의체의 미활성화이다. 즉, 순수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동 협의체가 원래의 기능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협의체 위원들 위생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섯째, 자율성의 원칙으로 개별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민과 관에 대한 연합교육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민과 관 따로 개별적인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민관협력의 두 주체들에 대한 연합교육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관이 민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소 고압적, 권위적, 위계적일 수 있기에, 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교육보다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 두 주체들 간에 보다 건강한 자율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첫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선과제로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4.14점), 사업비 확대(4.21점), 교육 확대(4.20점), 홍보 확대(4.27점) 등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구 협의체 지원 인력으로 지역에 따라 사무국장 혹은 간사 역할의 인원으로 1명 내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정도 인력으로는 실무분과의 내실화, 동 협의체 지원의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협의체 사업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요구된다. 협의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민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원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회원들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구 협의체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의 경우, ‘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예산의 적절성(2.92점), 분과사업의 적절성(3.08점)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개선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후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도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4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지만, 인력규모의 적절성(3.38점), 사업비 적절성(3.23점)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이후 ‘개선방안’에서도 인력확대(4.00점), 사업비 확대(3.92점)를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협의체 위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구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사업비 확대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인력의 직무만족도가 평균 3.64점 수준으로 평균 점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동 협의체 위원의 경우, 직무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0점을 나타내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요성(4.02점), 가치(4.13점), 권유(4.05점)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향후 동 협의체 운영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개선과제에는 다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3.90점), 사업비 확대(3.97점), 교육 확대(3.91점), 홍보 확대(3.94점) 등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면,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동 협의체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동 협의체 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도의 영역에서, 직무보상이나

업무량 그리고 업무지장과 업무소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그에 비해 자부심(4.05점), 업무 중요성(3.95점) 등을 보면 일정 정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볼 수 있다. 적절한 지원체계만 갖추어 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보여진다.

셋째, 대전시와 재단에 대한 사업지원 평가에서는 구 협의체 위원은 각각 3.75점과 3.80점을, 구 협의체 전담인력과 관계 공무원은 3.62점과 3.77점을, 동 협의체 위원은 3.45점과 3.53점을 동 협의체 전담인력과 슈퍼바이저 그리고 공무원은 3.26점과 3.68점으로 나타나, 대전시와 재단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대전시는 민관협력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재단은 실무적 차원에서 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력배치라는 점에서 향후 대전시 민관협력 사업은 아래와 같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표 5-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안)

구분	지역	목적	필요인력	비고
1단계	자치구 5개소	구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5명 ¹¹⁾	1개구*1명
	거점복지관 35개소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35명	거점복지관*1명
2단계	자치구 권역별	구동 지사협 연계 및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강화	20명(a)	5개구*4권역*1명 상근간사
3단계	79개소	동 지사협 및 민관협력 안정화	59명	79개동*1명-20명(a)

출처: 원종욱 외(2017)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

1단계로 구 협의체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구별 사무국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동 협의체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복지관에 동 단위 협의체와 민관협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성과 역량있는 정규 수행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3개년 시범사업 이후에도 민관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1) 지역복지의 핵심인력이므로 처우 및 신분 등에서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함

2단계는 구동 지사협 연계 및 동 지사협 역할 강화를 위해 1개구 4권역별로 1명씩 총 20명의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모든 동에 지사협 역할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인원을 제외한 총 59명의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민관협력의 핵심적인 기제로 구-동 협의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전형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및 대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인식조사’(송지현 외, 2019) 결과에 의하면, 대전시 복지현장의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형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타시도와 다른 대전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민관협력 단계는 초기 수준으로 여전히 형식적 제도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민관협력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법적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향후 복지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이 명확하다. 그렇기에 초기단계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나 실적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력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멀리 보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협력의 관계는 신뢰와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실시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복지영역이나 관련 인접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 모두를 포함하여 검토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는 관련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과의 연계나 관계 설정 등을 포함하여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승권·신희선·강성곤·오혜인(2014). 민관협력의 모형개발과 매뉴얼 : 우수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제선·박종철·유재윤·오혜인(2014).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종철·김제선·윤희숙·김지민(2015).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2차년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건·홍재봉·박순규·김인숙(2016). 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부산 복지개발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필두·권오철·이태수·안혜영·임창모(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 김필두·최인수(2018).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모델 구축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최인수(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용·민소영·주은수·한은영(2015). 사회복지관 사업 핵심 전략 연구: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허브 기능 강화 및 모델 구축.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문국경·송영준·유상엽·이수영(201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tool)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민소영·김이배·송아영·노수현·손지현·지혜은(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협력모델 및 역할 제언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박수지·박세경·이태진·김가희(2013).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강화방안-2013년 민관협력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문준·강영웅·최혜진·한영구(2018).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 원종욱·함영진·이철선·박세경·이삼식·김상철·우해봉·황도경·강혜규·안형석(2017).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희(2012). 지역사회복지의 민관협력체계 연구. 공공행정연구. 13(2). 63-82.

- 이현주·강혜규·정해식·전지현(2016). 지역사회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체계연구(1)-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 함영진·김태은(2017). 민간 중심의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8. 71-83.
- 함영진, 황정하, 오민수, 김성욱, 강혜규, 박세경, 김태은(2016).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영준·김진석·민소영·김아라(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홍영준 외(2016). 사회복지관 사업 핵심전략 연구 -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기능 강화 및 모델 구축.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용역 보고서.
- 송지현, 김동기, 정지웅, 신연수(2019). 대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인식 조사. 대전복지재단.
- 보건복지부(2019).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부록 1. 설문조사지 ①

ID		
----	--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현황(실태) 및 발전방안 조사**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재)대전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문의 및 연락처〉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042-331-8928

연구수행기관: 대전복지재단

연구지원기관: 대전광역시



알림: 본 설문지의 해당사업 기간은 공모사업 실시기간인 2018년 5월~2019년 현재까지입니다.

I. 다음은 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잘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구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구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	구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	구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구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6	구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7	구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8	구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					
9	구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10	구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11	구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12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					
13	대표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4	실무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5	실무분과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6	동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II. 다음은 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전담인력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2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3	활성화 사업비는 적절합니까?					
4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					
5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6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7	설문 진행자를 따라 구협의체의 대표사업 3가지를 작성해주세요	1)				
		2)				
		3)				
8	과 정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0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1	결 과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2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3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4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15		기타활동(조사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은 적절하였습니까?				
16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7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 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8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9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20		동협의체 운영지원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III. 다음은 향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2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3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4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8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9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					
10	이상의 내용 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IV.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학 령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전 공	① 사회복지전공 ② 타전공 ③ 해당사항 없음	
5	소속과 직위	민간기관 : ① 최고 관리자 ② 중간 관리자 ③ 현장 실무자	
		공공기관 : ① 5급 이상 ② 6급 ③ 7급 ④ 8급 ⑤ 9급	
		일반주민 : ① 기타조직회원(관변단체, 자생단체 등) ② 소속없음	
6	귀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7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구 소속입니까?	①동구 ②중구 ③서구 ④유성구 ⑤대덕구	

부록 1. 설문조사지 ②

ID		
----	--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현황(실태) 및 발전방안 조사**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및 관계 공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재)대전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문의 및 연락처〉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042-331-8928
연구수행기관: 대전복지재단
연구지원기관: 대전광역시



알림: 본 설문지의 해당사업 기간은 공모사업 실시기간인 2018년 5월~2019년 현재까지입니다.

I. 다음은 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잘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구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구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	구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	구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구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6	구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7	구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8	구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					
9	구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10	구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11	구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12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					
13	대표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4	실무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5	실무분과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16	동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II. 다음은 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전담인력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2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3	활성화 사업비는 적절합니까?					
4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					
5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6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7	설문 진행자를 따라 구협의체의 대표사업 3가지를 작성해주세요	1)				
		2)				
		3)				
8	과 정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0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1	결 과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2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3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4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15		기타활동(조사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은 적절하였습니까?				
16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7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 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8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9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20		동협의체 운영지원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III. 다음은 향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2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3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4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8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9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					
10	이상의 내용 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IV. 다음은 전담인력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림: 전담인력만 응답해주세요(공무원 제외)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나에게 부여된 업무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 편이다					
2	업무가 바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3	내가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량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4	행정적, 사무적인 일이 많아서 내가 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					
5	나의 업무는 소진율이 높다					
6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					
7	나의 직무는 발전성이 많은 편이다					
8	내가 하는 일은 전문적이다					
9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10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V.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 속	① 전담인력 ② 공무원(-① 구 , -② 동)
2	성 별	① 남 ② 여
3	연 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학 령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5	전 공	① 사회복지전공 ② 타전공 ③ 해당사항 없음
6	귀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담당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7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구 소속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8	귀 지역은 전담인력이 투입된 공모사업에 언제 부터 참여하였습니까?	① 2018년부터 ② 2019년부터
아래는 공무원만 응답해 주세요		
9	직 급	① 5급 이상 ② 6급 ③ 7급 ④ 8급 이하
10	직 령	① 사회복지직 ② 기타 직렬

부록 1. 설문조사지 ③

ID		
----	--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현황(실태) 및 발전방안 조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재)대전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과 관련
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9. 7.

〈문의 및 연락처〉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부 042-331-8928

연구수행기관: 대전복지재단

연구지원기관: 대전광역시

알림: 본 설문지의 해당사업 기간은 공모사업 실시기간인 2018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입니다.

I. 다음은 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잘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동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동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	동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	동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동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6	동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7	동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8	동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					
9	동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10	동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11	동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12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					
13	동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II. 다음은 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림: 질문 1번과 2번의 경우,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10개 거점복지관 관할 동 관계자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전담인력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2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3	활성화 사업비는 적절합니까?					
4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					
5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6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7	설문 진행자를 따라 동협의체의 대표사업 3가지를 작성해주세요	1) 2) 3)				
8	과 정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0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1	결 과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2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3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4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15	민관협력 슈퍼바이저의 활동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6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7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8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9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20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III. 다음은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2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3	자치구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4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8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9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					
10	이상의 내용 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IV. 다음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다					
2	나는 내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나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4	타인을 돕는 활동은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5	다른 사람들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싶다					



V.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학 령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본인 자발적 참여 ② 동장의 추천을 통해 ③ 봉사단체 추천 ④ 리·통장 모임 추천 ⑤ 지역주민 추천
6	귀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자격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②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이장, 통장 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⑥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
7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구 소속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8	귀 지역은 전담인력이 투입된 공모사업에 언제부터 참여하였습니까?	① 2018년부터 ② 2019년부터 ③ 해당사항 없음

부록 1. 설문조사지 ④

ID		
----	--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현황(실태) 및 발전방안 조사**

-전담인력,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공무원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재)대전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문의 및 연락처〉 대전복지재단 동북지지원부 042-331-8928

연구수행기관: 대전복지재단

연구지원기관: 대전광역시



알림: 본 설문지의 해당사업 기간은 공모사업 실시기간인 2018년 5월~2019년 현재까지 입니다.

I. 다음은 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잘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동협의체는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동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	동협의체 분과들은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	동협의체는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동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재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6	동협의체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7	동협의체는 지역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8	동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습니까?					
9	동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10	동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11	동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12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한 수준입니까?					
13	동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적절한 수준입니까?					

II. 다음은 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림: 질문 1번과 2번의 경우,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10개 거점복지관 관할 동 관계자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내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전담인력규모(1명)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2	전담인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3	활성화 사업비는 적절합니까?					
4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습니까?					
5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6	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7	설문 진행자를 따라 동협의체의 대표사업 3가지를 작성해주세요	1)				
		2)				
		3)				
8	과정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9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0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였습니까?				
11	결과	첫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2		두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3		세 번째 대표사업의 추진결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4	협력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시행하였습니까?					
15	민관협력 민관협력 슈퍼바이저의 활동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16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7	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8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19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20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의 성과는 적절하였습니까?					

III. 다음은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2	대전복지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3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4	거점복지관 등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8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9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나 정책(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다					
10	이상의 내용 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IV. 다음은 관련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림: 전담인력과 민관협력 슈퍼바이저만 응답해주세요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나에게 부여된 업무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 편이다					
2	업무가 바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3	내가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량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4	행정적, 사무적인 일이 많아서 내가 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					
5	나의 업무는 소진율이 높다					
6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					
7	나의 직무는 발전성이 많은 편이다					
8	내가 하는 일은 전문적이다					
9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10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V.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 속	① 전담인력 ②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③ 공무원(-① 구, -② 동)
2	성 별	① 남 ② 여
3	연 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학 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5	전 공	① 사회복지전공 ② 타전공 ③ 해당사항 없음
6	귀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담당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7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구 소속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8	귀 지역은 전담인력이 투입된 공모사업에 언제 부터 참여하였습니까?	① 2018년부터 ② 2019년부터 ③ 해당사항 없음
아래는 공무원만 응답해 주세요		
9	직 급	① 5급 이상 ② 6급 ③ 7급 ④ 8급 이하
10	직 렬	① 사회복지직 ② 기타 직렬

연구 참여 동의서(위원용)

안녕하세요? 대전복지재단의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팀입니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사업(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셨던 관계자들께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토의할 수 있는 초점집단을 구성하고, 자유로운 토의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진은 일체의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한 태도로 연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 및 자료 이용 등에 관해서는 아래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면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FGI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진이 연구조사의 녹취를 포함한 자료수집과 자료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3.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조사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이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 연구의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녹취된 내용에 대해서도 귀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5. 귀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귀하의 의중과 달라 그 의견을 피력하시면 이를 분석과정에 재 반영할 것입니다(아래 연구진의 연락처 참조).

이러한 본 연구의 취지와 면접 주제, 그리고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면접에 응해 주실 것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FGI 담당 공동연구 : 건양대학교 신희정 교수(010-8625-7465)

연구 참여자의 특성	주된 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여경력	년	
	주요 활동 분야 및 경력	분야 :	년
	기초정보	<input type="checkbox"/> 고졸 이하 성별:	<input type="checkbox"/> 대졸 이상 /전공: 연령:



부록 3.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초점집단인터뷰 질문지

<p>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구체적인 경험 혹은 평소의 생각)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생각(귀하 및 소속기관 역할과 기능)
<p>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의 적절성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
<p>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책연구 2019-6]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



- 발 행 일 : 2019년 12월
- 발 행 인 : 유 미
-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4917)
- 전 화 : 042-331-8928
- 팩 스 : 042-331-8924
- 홈페이지 : <http://www.dwf.kr>
- 인 쇄 처 : 신진기획인쇄사

ISBN 978-89-98568-60-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TEL : (042)331-8928 FAX : (042)331-8924 <http://dwf.kr>

